

인도의 부상과 우리의 대응방안

2006. 12

국 민 경 제 자 문 회 의

목 차

I. 인도경제의 부상과 전망	1
1. 개방과 개혁의 시동	1
2. 최근 인도경제 현황	9
3. 인도경제의 부상요인	13
4. 인도경제의 취약점	19
5. 향후 경제전망	28
II. 인도경제 부상의 의미	36
1. 시장으로서의 의미와 한계	36
2. 투자처로서의 의미와 한계	36
3. 자원·과학기술의 보완성	
4. 중국의 보완시장으로 활용	46
III. 우리의 대응방안	54
1. 투자진출 확대 방안	54
2. 교역 증진 방안	70
3. IT 협력확대 방안	74
4. 인력·과학기술 협력확대 방안	77
<참고 1> 인도 일반개황	81
<참고 2> 주요 경제지표	83
<참고 3> 한-인도간 분야별 교류협력 현황	84
<참고 3> 인도경제 관련 보고서 목록	84
참가연구진 명단	91

표 목 차

<표 I-1> 개혁·개방이전 인도의 경제성장률 변화추이	3
<표 I-2> 인도 금융위기 전후의 주요 정책 등의 변화	5
<표 I-3> 개혁·개방이후 인도의 경제성장률 변화추이	6
<표 I-4> 인도의 소득계층 변화 추이	7
<표 I-5> 인도 경제의 세계적 위치	9
<표 I-6> 2005년 인도 경제성장률	11
<표 I-7> 각 국 정상들의 인도 방문	12
<표 I-8> 주요 국가의 정부 경쟁력 비교	19
<표 I-9> 주요 국가의 기업투자환경 비교	20
<표 I-10> 인도 사업등록 등 소요일수 비교	21
<표 I-11> 인도 경제의 강점과 약점	22
<표 I-12> 중국과 인도의 인프라 비교	23
<표 I-13> 한·인도의 관세율 비교	26
<표 I-14> 인도의 비관세장벽 유형	26
<표 I-15> 주요기관의 인도 경제성장률 전망	30
<표 II-1> 한-인도간 수출입 품목	37
<표 II-2> 우리나라의 대인도 수출품목 분석	39
<표 II-3> RCA분석에 따른 한-인도간 교역확대 가능분야 ·	39
<표 II-4> 우리 기업의 대인도 투자 현황	42
<표 II-5> 인도의 대한국 직접투자 추이	43
<표 II-6> 주요 3사의 대인도 투자 성과	44

그림 목차

<그림 I-1> 인도 산업구조의 변화 추이	10
<그림 I-2> 인도의 반덤핑 조치	27
<그림 I-3> 인도와 중국의 경제성장률 전망	29
<그림 I-4> 인도의 인구 추이	30
<그림 I-5> 최근 6개년간 인도 자본재/소비재 수입액 현황	34
<그림 II-1> 우리나라의 대인도 수출입 및 무역수지 추이	· 36
<그림 II-2> 아시아 4 지역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 추이	· 41

I. 인도 경제의 부상과 전망

1. 개방과 개혁의 시동

가. 개혁·개방이전 인도경제

폐쇄적인 경제개발 모형 운영

인도는 1947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후 舊소련의 사회주의 경제개발 모형을 도입하여 거대 내수시장을 중심으로 자급 자족형 경제개발(네루식 경제개발 모델)을 추진하였다. 이 경제 개발 모델은 1991년 외환위기를 맞을 때까지 지속되었다¹⁾.

독립당시 인도는 낮은 저축률로 인한 자본의 부족, 전체 인구의 80%이상 차지하는 농업인구, 소수의 기업가 계층 등 경제발전에 필요한 제반여건이 부족하였다. 인도정부는 이러한 여건을 고려하여 정부주도의 계획경제발전 모형을 채택하였다.

동 모형은 ①국영기업을 통한 중화학 산업 육성 ②유치산업 보호 ③높은 저축에 의한 투자확대 유도 ④수입대체 ⑤경제를 포함한 사회 전반적 발전을 목표로 하였다.

50~60년대에는 이러한 모형이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었으나, 폐쇄적인 경제개발 모형의 한계로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즉, 인도정부는 이러한 폐쇄적인 사회주의식 경제모형을 운용하기 위해 과도한 규제를 도입함으로써 인도는 '규제의 천국'으로 변하였다. 주요 규제로는 첫째, 철강, 화학 등을 포함한 중화학 산업 대부분이 공공분야로

1) 비록 1980년대 부분적인 개방 및 개혁정책이 추진되기도 하였지만, 사회주의식 경제모델 근간은 1990년까지 이어졌다.

묶여 국영기업 위주로 육성되었으며, 산업개발법(IDA)에 의해 생산 품목, 생산시설 규모, 생산지역 등 생산활동에 대한 정부의 허가절차를 거치도록 하였다.

둘째, 엄격한 노동법 적용으로 근로자 해고가 사실상 어려워져 경직적인 노동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기업의 경영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²⁾.

셋째, 외국인 지분 한도를 40%로 제한하는 외환관리법(FERA)의 시행으로 주로 경영권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 투자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³⁾

넷째, 영세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영세기업보호법(SSI)을 도입하며 은행을 국유화하였으나, 이는 대기업 진출을 제한하고 오히려 특정부문의 성장을 저해하였다.

끝으로, 관료주의와 공기업 중심의 정책으로 생산성 저하, 보조금의 지속적 증가 등 오히려 경제의 역효과적인 요소들이 나타났다.

물론 이러한 상황에서도 인도경제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1980년대에 부분적이거나 시장경제원리의 도입을 시도한 적이 있다. 선진기술 분야, 대규모 투자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51%까지 확대하였으며, 투자확대를 통한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막대한 규모의 외채를 조달하기도 하였다. 그 결과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 싱가포르 등과 같은 아시아 국가들이 인도를 전략적 시장으로 삼아 인도에 투자를 확대하기도 하였다.

2) 100인 이상 사업체는 노동자 해고시 3개월 전에 주정부와 노조에 통보해야 하며, 해고당한 근로자는 불만해소위원회 진정, 법정소송 등 불복제기 가능. 실제적 법정소송에서는 대부분 노동자 해고를 인정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

3) '74년 코카콜라가 인도에서 사업을 철수한 것도 외환규제에 따른 것임

그러나, 인도는 당시 강력한 규제가 여전하여 실질적인 투자처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다. 오히려, 투자자금으로 차입한 막대한 규모의 외채가 커다란 부담이 되었다. 또한, 경제체제를 절대적으로 소련에 의존하던 상황에서 '90년대초 舊소련 붕괴 등으로 인한 루피(Rupee) 對 소련 루블(Rouble)의 구상무역이 곤란해짐에 따라 뼈아픈 금융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4)

그 당시 인도경제는 강력한 규제가 국내외 기업의 투자로 이어지고, 저투자는 궁극적으로 '힌디성장률(Hindi rate)'이라는 3~4%의 저성장 구조를 고착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저성장 경제에서는 절대빈곤층을 총인구의 40%까지 증가시켰다. 이와 더불어 인도의 對세계 수출 비중도 또한 점진적으로 감소하였다.

<표 I-1> (개혁·개방이전) 인도의 경제성장률 추이

(단위 : %)

구 분	1961	1971	1981	1991
GDP성장률	3.1	3.6	5.6	2.5
대세계 수출비중	1.1	0.6	0.4	0.5

자료: UN-국제무역 통계연감, Economic Survey of India

4) 1984/85년에 481억 루피의 외채규모가 1989/90년에는 1,265억 루피로 거의 3배 정도 증가하였다(Datt 외 2005)

나. 개혁·개방이후 인도경제

친시장적 대외개방 정책으로 전환

1991년 막대한 외채규모, 舊소련 붕괴로 인한 루블(Rouble)화 對 루피(Rupee)화 구상무역 곤란 등으로 금융위기⁵⁾를 맞게 된 인도는 기존의 사회주의식 계획경제 체제를 포기하고 시장경제 원리를 근간으로 하는 혁신적인 개혁·개방정책을 채택하였다.

개혁정책은 산업정책, 공공부문 정책, 외국인 투자정책 등을 망라하여 광범위하게 추진되었다. 우선, 인도정부는 대외부문의 악화가 외환위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하여 고정 환율제에서 변동환율제로 전환하였다.

두 번째로 그동안 국내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부패의 온상이 되었던 산업 허가제를 폐지(철도, 국방 등 일부 분야제외)하여 생산 활동의 자율성을 확대시켰다. 끝으로 공기업의 민영화와 보조금 삭감을 통해 자유 시장원칙을 도입함으로써 외국인 투자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시장경제로의 전환은 인도시장을 급속하게 성장시키는 중요한 전기를 마련해 주었다. 1951~74년 3.6%, 1981~91년 5.4% 등 저조하던 GDP 성장률이 개혁이후 14년 동안(1992~2005년) 연평균 6.3%라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것이다. 특히, 최근 3년간 경제성장률이 평균 8.1%로서 더욱 급격히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인도경제가 고성장 시대에 본격적으로 접어들었음을 보여준다.

<표 I-3> (개혁·개방이후) 경제성장률 추이(단위: %)

1992-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6.0	5.2	4.6	8.5	7.5	8.4

자료: Panagariya 2004, Global Insight

5) '91-'93기간중 인도는 IMF로부터 35.6억달러의 구제금융을 받음

<표 I-2> 금융위기 전후 주요 경제정책 변화

구 분	외환위기 이전(~1991년)	외환위기 이후(1991년~)
성 장 모 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지향 자급자족 모델 (네루형 경제개발 모델) - 유치산업 보호정책 - 수입대체 정책 - 중화학산업 진흥정책 - 경제·사회 전반적인 발전 도모 - 높은 저축에 의한 투자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지향 시장경제 모델 - 친 시장형(pro-market) - 대외개방 - 공공분야의 민영화 - 외국인 투자 확대 - 농업성장 의존 탈피
투 자 및 무 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별적 무역자유화 (Positive System) ○ 수입허가제 ○ 외환관리제(FRRA) ○ 영세업종(SSI) 엄격적용 ○ 농업부문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괄적 무역자유화 (Negative System) ○ 자동 승인제 및 허가제 ○ 영세업종 기준 : 100만 달러로 기준상향
교역장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높은 관세율·비관세 장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진적 관세율 인하
산 업 정 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개발법(IDA): 생산품목 및 생산규모·장소 등 규제 ○ 산업허가제 ○ 대기업 투자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허가제 폐지(일부 품목 제외) ○ 대기업 투자 제한 축소 ○ 법인세율 인하
노 동 및 근 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직적 노동법 적용 - 100명 이상 고용업체 해고제한 - 여성노동자 근로조건 제한 - 복수 노동조합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법 개혁 추진
정 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력한 중앙정부 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정부 개입 최소화

고성장에 따른 소득증대는 분배구조도 서서히 개선시키기 시작하였다. 대부분 다국적 기업들이 진출해 있는 IT산업의 경우, 부가가치의 대부분이 임금으로 배분되어 소득분배 효과가 크게 발생하였다. 산업생산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빈곤계층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신 소비 계층이 급증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표 I-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근 10년 동안 인도의 중산층인 월소득 120~530만원 소득계층의 가구수는 18.2% 증가하였다. 이에 반해, 저소득층인 40~55만원과 40만원 이하의 소득계층의 가구수는 각각 16.6%, 11.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IT산업 성장으로 새롭게 형성된 신 소비층 등 중산층 급증은 내구소비재 수요를 폭발적으로 증가 시켰다. 예를 들어 최근 휴대폰 가입자가 매달 500만명씩 증가하고 있고, 2006년 6월말 현재 휴대폰 가입자는 1억명을 돌파하였다. 또한, 2000년 500만대에 불과하던 자동차 보유대수도 2005년말 현재 1,000만대로 크게 증가하였다.

<표 I-4> 소득계층별 인구비중 변화 추이(단위 : 만원)

구 분	1995/96		2001/02		2006/07(F)	
	가구수	비중(%)	가구수	비중(%)	가구수	비중(%)
Rs 215,000이상 (530만원 이상)	1.2	0.7	2.5	1.4	5.2	2.6
Rs 45,000~215,000 (120~530만원)	32.5	19.7	46.4	25.7	75.5	37.9
Rs 22,000~45,000 (55~120만원)	54.1	32.8	74.4	41.2	81.7	41.0
Rs16,000~22,000 (40~55만원)	44.0	26.7	33.1	18.3	20.2	10.1
Rs 16,000 이하 (40만원 이하)	33.0	20.0	24.1	13.4	16.5	8.3
계	164.8	100.00	180.5	100	199.1	100.0

자료: NCAER

인도의 아시아 중시 정책 (Look East Policy)

◇ 추진배경

인도는 1990년대 초 舊소련 붕괴에 따른 교역량 급감(90년 422억 달러→91년 373억달러), 이에 따른 대체시장 확보 필요 등으로 새로운 대외 경제정책이 절실하였다. 개혁·개방정책의 도입과 함께 새로운 성장모형이 필요하였고, 여기에 가장 합당한 대상이 아시아이었다.

아시아는 일본, 한국 등 신흥공업국가(NICs), 동남아, 중국 등으로 순환고리를 이루며 고성장을 달성함으로써 인도가 추구해야 될 모형으로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1991년 라오 총리는 東아시아를 “세계경제로 나아가는 발판 (springboard)”으로 활용할 것임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 일본과 아세안 중심의 정책 성과 미흡

인도는 투자유치 및 기술도입 대상국가로 일본을 선정하고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였다. 이는 일본의 투자로 한국, 동남아

등이 고도성장을 이룬 것으로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양국간 투자 및 경제교류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90년대 인도 전체의 대외교역 규모는 연평균 9.5% 증가한 반면, 양국간 교역규모는 0.4% 증가에 그치는 등 매우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일본과의 협력 부진에 실망한 인도정부는 아세안 국가를 새로운 경협 파트너로 선택하였다. 1995년 아세안 정상회의시 정식대화 상대국(Full Dialogue Partner)이 된 것이 계기가 되었다. 더욱이, 인도의 APEC 가입노력이 무산되면서 對아세안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졌다.

인도의 아세안 경협 강화노력의 일환으로 싱가포르, 태국, 아세안과 FTA를 체결하였다. 그러나 그 성과는 인도정부의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 즉, 교역면에서는 다소간의 성과가 있었으나, 직접투자면에서는 성과가 부진하였다.

◇ 새로운 전략적 파트너로서의 한국

인도는 아시아 중시정책의 성과가 미진함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경제수준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아시아 국가 특히 동아시아 국가들과 좀 더 적극적인 경제협력이 필요하였다.

일본, 아세안과의 부진한 경협은 인도가 우리나라에 눈을 돌리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LG, 삼성, 현대차 등 우리 기업의 인도내 성공은 인도로 하여금 우리나라를 아시아 중시 정책의 전략적 핵심국가로 인식하게끔 하였다. 나아가, 최근 포스코의 120억 달러에 이르는 對인도 투자결정도 인도내 우리나라의 위상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도는 중국, 일본에 앞서 우리나라와의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우리나라와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인도와의 경제협력을 바탕으로 인도의 거대한 소비시장을 선점하는 한편, 인도를 남아시아 진출의 거점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2. 최근 인도경제 현황

가. 인도경제의 급속한 성장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6~8% 고도 성장 구현

인도경제는 1991년 개혁·개방정책이후 서비스업의 견실한 성장에 힘입어 6% 내외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나타내었다. 더욱이, 최근 3년간 인도경제는 평균 8.1%(2003년 8.5%, 2004년 7.5%, 2005년 8.4%)의 고도 성장률을 달성하는 등 중국 다음(10.0%)으로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Global Insight).

이러한 고도성장을 바탕으로 인도경제는 2005년 GDP 규모가 7,855억 달러로 증가하여 우리나라 다음으로 세계 12위(전세계 GDP의 1.8%)를 차지하였다. 외환보유고 또한 2005년 8월 현재 1,444억 달러로 세계 6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한편, 실질 구매력 평가기준(PPP)으로는 38,155억 달러로서 미국(9.7조 달러), 중국(5조 달러), 일본(3.2조 달러)에 이어 세계 4위의 경제규모이다. 또한, 인도는 약 11억 인구중 적게는 1억, 많게는 3억 정도의 중산층을 보유하고 있는 거대한 소비시장의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다.

<표 I-5> 인도 경제의 세계적 위치(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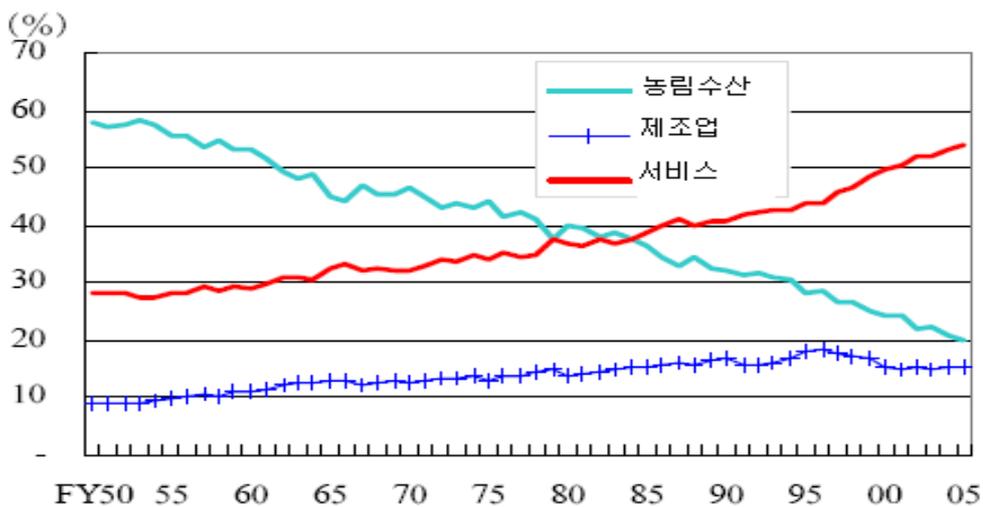
구 분	PPP 기준		GDP 기준	
	비 중	순 위	비 중	순 위
미 국	20.3	1	28.1	1
중 국	14.1	2	5.0	4
일 본	6.5	3	10.2	2
인 도	6.3	4	1.8	12
한 국	1.7	13	1.8	11

주 : PPP(Purchasing Power Parity), GDP에 대한 비중 및 순위는 2005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순위를 나타냄.

자료 :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Database*, 1 July 2006.

한편, 인도의 산업별 GDP 구성비중은 농업부문 21%(취업인구의 60%), 제조업부문 15%, 서비스부문 57%이다. 인도경제는 제조업이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여타 개도국의 성장모델과는 달리, 서비스산업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가운데 제조업이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서비스 주도형 성장모형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특히, 영어구사력을 지닌 풍부한 인적자원과 저렴한 임금을 바탕으로 다국적 기업의 비즈니스 아웃소싱(Business Process Outsourcing)에 참여함으로써 서비스업 성장을 일구어 낸 것은 인도경제 도약의 가장 큰 특징이다.

<그림 I-1> 인도 산업구조의 변화 추이



자료: UFJ은행

인도경제는 2005년 건설 및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성장을 가속화하면서 분기별 성장률도 7~9%를 기록하고 있다. 제조업 부문도 또한 자동차, 철강 및 섬유산업 등에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농업부문도 일시적으로 우기(몬순) 강우량의 부족으로 농업생산 증가율이 1.1%에 그친 2002년도를 제외하고는 안정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다.

<표 I-6> 인도 부문별 경제성장률¹⁾(’05년)

구 분	GDP (천만 루피)	GDP 성장률(%)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농수산업	516,603	3.4	4.0	2.9	5.5
광산업	53,090	3.1	-2.6	0.0	3.0
제조업	393,186	10.7	8.1	8.3	8.9
전력, 가스, 수력	55,888	7.4	2.6	5.0	6.1
건 설	174,712	12.4	12.3	11.5	12.0
무역, 호텔, 운수, 통신	680,208	11.7	11.0	10.2	12.9
채정 및 부동산	351,582	8.8	10.5	8.9	10.5
사회복지	370,072	7.3	8.0	8.4	7.6
총 계	2,595,339	8.5	8.4	7.5	9.3

주1) 인도의 회계년도는 매년 4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임.

나. 주요국의 경제협력 대상국으로 부상

인도시장 선점 등을 위한 경제협력 확대

인도경제의 급성장에 따라 인도가 향후 세계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르는 가운데,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프랑스 등 세계 주요국들이 정상회담 등을 통해 인도와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2월 부시 美대통령이 인도를 전격 방문하여 인도측과 양국간 경제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양국은 7월에 핵협력협정을 체결하여 양국간 협력체제를 강화 하였다. 동 협정은 미국이 핵확산금지조약(NPT) 미가입국인 인도에 대해 예외적으로 민간용 핵기술과 연료를 공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서,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의 획기적인 인도협력 강화의 주요사례가 되고 있다.

중국은 1962년 인도와의 국경분쟁이후 오랜 갈등관계를 청산하고 인도와의 경제협력 관계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 2005년 4월 양국간 정상회담을 통해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에 합의한 바 있고, 2006년을 양국간 '우정의 해'로 지정하는 등 인도와의 협력관계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또한, 인도와의 FTA 추진을 위해 1차 공동연구를 마친 다음, 현재 제2차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최근 인도 소비시장의 확대, 중국 리스크 등을 감안하여 한동안 저조했던 대인도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이에 힘입어 일본은 인도의 4번째 투자대상국이 되었다. 일본은 현재 인도와의 FTA 추진을 위해 양국간 공동연구를 마치고, FTA 협상을 앞두고 있다.

쉬락 프랑크 대통령도 많은 경제인과 함께 인도를 방문하여 양국이 공동으로 민간 핵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협정을 체결하는 등 양국간 경제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이외에도 호주의 대인도 경제협력 합의, 인도와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에너지 협력 확대 등 많은 국가들이 인도와의 경제협력을 확대함으로써 거대한 인도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인도의 경제적·전략적 가치가 크게 증가하였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표 I-7> 각 국 정상들의 인도방문 일정

국 가	방 문 자	일 시	주요 협의
미 국	조지 W 부시 대통령	2006.2	핵관련 협정
프랑스	자크 쉬락 대통령	2006.2	민간 핵협력
중 국	원자바오 총리	2005.4	국경문제

영 국	토니 블레어 총리	2005.9	EU와 인도의 경제협력 방안
일 본	고이즈미 총리	2005.5	상임이사국 진출 상호지지, 일본 기업 인도 진출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2004.12	우주공동 개발, 에너지, 미사일 공동 개발
U N	코피아난 사무총장	2005.4	
한 국	노무현 대통령	2004.10	대인도 투자 및 교류확대

3. 인도경제의 부상요인

가. 대내적 요인

1

규제 완화

‘91년 이후 인도 경제 고성장의 밑거름이 되었던 것은 인도정부가 추진한 산업, 공공분야, 교역 및 외국인 투자 등에서의 규제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허가제 폐지 등을 통해 산업 투자를 자유화하였다. 산업개발법에 의한 정부의 허가절차로 1991년 이전에는 기업들의 투자가 제한되었다. 그러다가 안보, 전략, 환경 등 15개 분야를 제외하고는 산업허가제를 폐지함으로써 기업들로 하여금 자유로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이는 산업허가로 인해 투자가 제한되었던 분야에 기업들이 새로이 투자를 확대 함으로써 투자율이 증가하고 신기술도 적극 유입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둘째, 공기업의 민영화, 재정지원 축소 등 공공분야에 대한 대폭적인 개혁이 이루어졌다. 그 내용으로는, ①도로, 항만 등

공공투자분야에 민간자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②전력, 도로 등 일부부문에 대한 공공산업 지정을 해제하여 민간인 투자를 확대하였다. 이는 종전의 공공분야 중심 경제개발 전략이 개혁이후 일부 수정된 것이다. ③공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축소하여, 경영효율화를 추구하였다. ④경영성과가 낮거나, 좋지 않은 공기업에 대해서는 산업 재정 구조조정위원회(Board for Industrial and Financial Reconstruction)에 의해 재할 또는 구조조정을 추진하였다.

셋째, 인도정부는 외국인 직접투자를 대폭 개방하였다. 기술이전, 현대화된 마케팅 및 경영기법이 도입될 수 있는 부문은 외국인 직접투자를 100%까지 허용하였다. 이는 기업의 자금조달 원천이 국내 부채차입에서 해외자본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외국기술협정에 의한 로얄티 지불도 또한 국내 매출의 5%, 수출판매의 8%까지 허용하는 자동승인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러한 외국인 투자 개방정책으로 정부의 보호영역이 점차 축소되면서 외국인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경쟁이 촉진되었다.

넷째, 정부 역할을 축소하였다. 정부 역할을 빈곤축소, 인프라 확대, 보건 의료, 교육, 전략산업 분야 등 특정분야에만 한정하였다. 이는 기업들로 하여금 경쟁원리에 의해 효율적 경영활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계기가 되었다.

2

우수한 IT 인력기반

인도의 전반적인 교육환경이 매우 열악하여 기초 교육조차 받지 못하는 인구가 40%내외를 차지하고 있지만, 고등교육을 받은 우수한 인력들이 인도 경제 성장의 밑거름이 되고 있다.

소수의 우수한 인력들은 유치원 교육과정부터 엄격한 선발절차, 교육과정을 갖춘 사립학교에서 교육을 받는다.

정부 공용어만도 18개에 달하는 다양한 언어 환경은 인도인들에게 탁월한 언어구사 능력을 갖게 하는 바탕이 되고 있다. 또한, 전통적으로 철학적 삶을 중시하는 성향을 가진 인도인들은 수학, 물리 등 기초과학에 매우 뛰어난 재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교육환경을 토대로 경제, 문학, 과학분야 등에서 6명의 노벨상 수상자가 나올 만큼, 다방면에서 세계적인 인물들을 배출하였다. 이중 아시아 최초의 노벨상 수상자로서 시인이자 교육가, 사상가인 타고르가 있고, 아시아 최초의 노벨물리학상을 받은 라만도 있다. 또한, 1998년에는 후생 경제학에 기여한 공로로 아마르티아 센(Amartya Sen)이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인도의 수학과 영어에 능한 우수한 인력은 아시아의 다른 개도국들과는 달리 인도 경제가 산업사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IT강국이 될 수 있는 밑바탕이 되었다. 또한 제조업 등 하드웨어 기반의 취약한 상황을 감안한 인도정부가 90년대초 대대적인 소프트웨어 인력양성 방침을 추진하였는데, 이러한 정책은 90년대 중반이후 인도 IT발전을 위한 풍부한 인적 자원을 제공하는 토대가 되었다.

인도의 IT인력은 고등학교에서 컴퓨터언어(예: C, C++) 등 교과목의 50%를 IT 관련과목으로 이수한다. 그리고, 매년 1,300개의 인도 대학에서 13만 명의 IT 전공자가 배출되고 있다. 현재 인도 방갈로에 15만 명 정도의 IT 인력이 근무하고 있으며, 미국의 실리콘 벨리 등 세계 주요 IT분야로 적극 진출하고 있다.

현재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있는 벤처기업 CEO의 40%, 전체 근무인력의 30%를 인도 출신이 차지하고 있다. 대표적인 IT 업체인 마이크로소프트(MS)사의 34%, IBM사의 28%가 인도 출신이다. 또한, 미국내 전체 과학자 중 12%, 미국 의사의 30%가 인도인이며, 미국의 기술자용 비자의 약 50%가 인도인에게 발급되고 있다.

IT산업은 인도정부의 IT 진흥정책과 더불어 IT산업의 아웃소싱 확산추세에 따라 급성장하게 되었다. 90년대 중반이후 소프트웨어 수출이 본격화된 지 10년 만에 인도 IT산업은 GDP의 5%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급성장으로 IT 서비스 관련 수출이 연간 200억 달러를 넘어 만성적인 상품수지 적자를 보전하는 등 인도 경제의 안정성이 크게 제고되었다.⁶⁾

나. 대외적 요인

인도와의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미국의 전략 유지

세계 경제는 현재 미국, 중국, 일본 등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특히,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세계의 경제대국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은 미국의 주요한 견제 대상이 되었다.

또한, 9.11 美테러 발발이후 미국주도의 對테러 전쟁에 협력했던 파키스탄은 카슈미르 분쟁, 핵전쟁위험 등으로 미국의 요주의 국가가 되고 있다.

최근 중국과 인도는 1962년 국경분쟁으로 인한 갈등관계를 해소하고 양국이 경제적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이 전략적

6) 인도는 2002년 사상 처음으로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 이후 흑자세를 유지하다 2005년이후 고유가에 따른 무역적자가 대폭 증가하면서 최근 경상수지가 적자세로 반전됐다.

동반자관계를 구축하는 등 급속한 관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러시아는 냉전시대에 양국간 친밀한 관계의 상징이었던 인-소 우호협력조약의 재가동을 위해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항공모함, 최신 탱크 등을 공급하는 등 정치적·군사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정세의 변화속에서 미국은 중국견제 등을 통한 아시아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유지하는 한편, 미국 IT 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인력조달 차원에서 인도와의 전략적 제휴를 보다 강화하고자 하였다.

인도 경제는 IT산업을 토대로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확고히 구축한 가운데, 전략적 차원에서 인도와의 협력을 강화하려는 우호적인 국제정세가 형성되면서, 인도경제 성장이 더욱 탄력을 받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미국이 인도와의 경제협력을 당분간 강화해 나갈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인도 경제는 향후 안정적 성장을 위한 호기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4. 인도경제의 취약점

가. 열악한 비즈니스 환경

인도경제는 8%이상의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부의 투명성이 낮고, 노동시장 환경이 경직적이며, 사회간접 자본이 부족하여 국가경쟁력은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낮은 경쟁력은 인도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다.

대부분 국가경쟁력 평가 기관들은 인도경제의 경쟁력 수준을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매년 국가경쟁력 수준을 발표하는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에 따르면, 인도 경제는 전년대비 5단계가 상승하였으나, 아직도 낮은 수준인 50위 (중국 49위, 전체 117개 국가)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과 규제체제 측면은 보통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정부 투명성, 관료성, 부패 측면에서는 여전히 하위에 머물러 있다.

<표 I-8> 주요 국가의 정부 경쟁력 비교

구 분	인도	중국	한국	비고
법 및 규제 체제	5.18	6.20	3.89	0~10
투명성	4.54	5.18	4.36	0~10
관료성	2.79	2.82	3.63	0~10
부패성	1.69	2.24	4.23	0~10

자료: IMD World Competitiveness Indicator, 2006

또한, 세계은행과 국제금융공사(IFC)의 '2006년 기업환경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는 창업, 소유권 등기 등 사업단계별 기업투자 환경이 전체 155개국 중 116위를 차지하여 매우 낮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허가취득'과 '투자자 보호' 항목을 제외하고는 창업, 고용해고 요건 등 대부분 항목이 100위 이하의 저조한 경쟁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복수노조가 법적으로 보장되고, 100인 이상 고용기업은 근로자 해고시 노조의 동의요건으로 인해 해고가 거의 불가능한 경직적인 노동환경을 가지고 있어 고용해고 여건이 낮게 평가되었다.

이러한 평가수치는 중국의 91위, 우리나라의 27위에 비해 매우 낮은 결과이다. 이는 인도에서의 기업투자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표 I-9> 주요 국가의 기업투자환경 비교

지 표	인도	중국	한국
창업	116	126	97
허가취득	90	136	25
고용해고 여건	124	87	105
소유권 등기	116	24	64
융자여건	101	113	25
투자자 보호	29	100	87
납세	103	119	44
교역절차	130	48	16
폐업	118	59	13
종합순위	116	91	27

자료: 세계은행, 2005. Doing Business 2006

또한, 사업 등록기간도 OECD 평균 25일보다 4배가 많은 평균 89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등록에 필요한 서류가 너무 많고, 사업 등록에 관련되는 부서가 많아서 사업등록에 상대적으로 많은 시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인다.

<표 I-10> 인도 사업등록 소요일수 등 비교

항 목	인도	아시아	OECD
사업 등록 절차(횟수)	11	9	6
사업 등록 소요(일)	89	46	25
자산 등록 절차(횟수)	6	5	4
자산 등록 소요(일)	67	55	34
계약 집행 절차(횟수)	40	29	19
계약 집행 소요(일)	425	349	229

자료 : World Bank Doing Business 2005

한편, 국제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과학자와 기술자의 능력이 세계 최고 수준인 점 등 주로 인적자원과 관련된 부문은 인도경제의 주요 강점인 반면, 인구 1백 명당 이동전화기 보급 대수가 세계 87위, 전기공급의 질이 세계 81위 등 주로 인프라 관련 부문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11> 인도 경제의 강점과 약점

강 점	순위	약 점	순위
과학자와 기술자의 능력	1	1백명당 이동 전화기 보급대수	87
지역 기반 경쟁자들의 규모	4	전기공급의 질	81
지방의 부품조달 능력	5	1만명당 인터넷 사용자수	81
경영교육 기관의 질	6	공립학교의 질	75
지방 공급업자의 수	6	지역의 불균형	69
지방의 자본시장 접근성	7	관세 자유화	60
외국 기술허가의 보급	8	전반적 인프라의 질	60
지방의 가공 기계 이용도	9	항구기반 시설의 질	60
수학, 과학 교육의 질	11	경찰 서비스의 의존도	57

자료: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 Business Competitiveness Index

나. 인프라 부족

인프라가 만성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는 제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인프라 부족은 인도 경제성장의 최대 아킬레스 건으로 지적되고 있다. 중국의 인프라 수준과 비교해 보면 부문별로 적게는 3배에서 많게는 36배까지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도로(중국의 1/35), 항만(중국의 1/17) 등 물류 인프라가 현저히 낙후되어 제조업 성장에 치명적인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표 I-12> 중국과 인도간 인프라 비교(2002년 기준)

	중국(A)	인도(B)	A/B
GDP (10억 달러)	1,233	515	2.4
면적 (1,000평방 Km)	9,598	3,287	2.9
인구 (100만 명)	1,285	1,055	1.2
도로 총연장 (100만 Km)	116	3.3	35.2
항만 컨테이너 취급량 (1000TEU)	43,970	2,591	17.0
발전설비 (MW)	319,000	109,000	2.9
전화 가입자 (100만 명)	489	82	6.0
전화 보급률 (%)	38	8	4.8

자료 : ICICI Bank

또한, 인프라 중에서도 특히 전력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다. 전력 생산용량이 10만 1,000MW로서 2006년 5월 현재 전력수요 대비 10.7%가 부족하며 피크타임에는 13.1%정도 모자란 실정이다. 인도 정부는 2012년까지 전력생산용량을 29만 2,000MW로 증가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으나, 지난 7년간 전력 증가율이 연평균 5%에 불과한 실정임을 감안하면 향후 증가전망도 불투명하다.

특히, 시골지역(Villages) 전력공급이 전력수요의 80%(2004년 기준), 농촌가정 (Rural Households)은 44%에 머물고 있다. 선거를 의식한 정치인들이 산업계보다 이들 지역에 공급을 우선

시하는 경우 기업의 전력사정이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

다. 제조업의 취약성

제조업은 농업이나 서비스산업에 비해 고용창출과 산업 생산에 대한 기여도가 큰 산업이다. 그러나, 2005년말 현재 인도 제조업의 GDP 비중은 15%수준으로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다. 낮은 수준의 제조업은 인도 경제의 성장을 고속화하는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인도 제조업이 취약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단계적인 관세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인도의 수입관세가 인도제품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인도는 원자재와 부품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생산구조를 가지고 있다. 인도정부는 원자재와 부품에 대해서도 높은 수입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원자재 등 투입요소의 비용을 상승시켜 인도기업의 생산 비용을 증가시킴으로써, 인도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둘째, 인도의 조세제도 역시 복잡하고 세율이 높아 제조업 경쟁력에 불리한 영향을 주고 있다. 인도의 조세는 법인세, 소비세, 부가가치세, 주세, 지방세, 지역통관세, 인지세(stamp tax), 운송세 등 종류도 다양하다. 통상 완제품에 부과되는 세금이 25~30% 수준인데, 이는 중국의 15%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높은 세부담은 완제품의 가격상승을 가져와 국내 소비를 억제시키고, 제품의 수출 경쟁력을 저하시킨다.

셋째, 산업허가제 폐지 등으로 외국인이 투자할 수 있는 분야 등은 확대되었지만, 아직까지도 외국인 투자에 복잡한 승인 및 허가절차가 적용되고 있다. 최근 World Bank 보고서에 의하면, 외국인이 인도에서 투자하여 개업하는 데까지는 평균 89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중국의 평균 41일보다 2배에 해당하는 기간이다. 또한, 계약 집행절차에 중국의 241일에 비해 훨씬 많은 평균 425일이 소요되고 있다.

넷째, 복수노조 허용, 100인 이상 고용기업의 근로자 해고시 노조의 사전 동의 등 경직적인 노동법으로 인해 노동자 해고가 어렵고, 빈번한 노동쟁의로 인해 기업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다.

다섯째, 대부분 국민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어, 제조업에 활용될 노동력 공급이 제약을 받고 있다. 2002년 기준 UN의 인력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을 보면, 순위가 미국은 4위, 한국은 28위, 중국은 94위인데 비해, 인도는 127위이다. 또한, 문자 해독률 61.3%(vs 중국 90.9%), 고등교육 진학률 55%(vs 중국 81%) 등 전반적인 교육수준이 매우 낮다.

이러한 기초교육의 결여는 제조업 분야에서 다수의 노동 인구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만들고 있다. 인도가 연평균 12% 이상의 경제성장을 하는 경우 매년 150만명의 기술직 노동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교육 수준에서는 이에 부응할 수 있는 인력수급이 용이하지 않다.

이외 열악한 인프라 기반, 복잡하고 다양한 규제 등이 인도 제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요인임은 물론이다.

라. 대외개방과 경제개혁의 미흡

인도는 1991년 이후 단계적인 관세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관세율, 비관세장벽 등이 존재하여 인도경제의 성장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비농업부문의 경우 평균 관세율이 1997년 40%에서 2004년에는 27.9%로 낮아졌으나, 아직은 우리나라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표 1-13> 한·인도간 관세율 비교(2004년 기준)

국명	단순평균 양허세율(%)			단순평균 실행세율(%)		
	전품목	농산품	비농산품	전품목	농산품	비농산품
인도	49.8	114.5	34.3	29.1	37.4	27.9
한국	15.9	52.9	10.1	11.2	41.6	6.7
차이	33.9	61.6	24.2	17.9	-5.8	21.2

자료: WTO, World Trade Report 2005

다방면에 걸친 높은 비관세장벽도 상존하고 있다. 통관 지연, 국영기업 등 수입선 지정 품목, 현지부품 사용비율 규제 등이 주요 비관세 장벽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국내 무역업계는 외면적인 규제이상으로 관행적으로 부과되는 각종 장벽과 중앙·지방정부 공무원의 비협조적인 행정 처리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표 I-14> 인도의 비관세장벽 유형

유형	내용
통관절차	○ 통관의 지연 및 보류
수입규제	○ 수입금지 품목, 수입선 지정 품목 등 운영
기술 장벽	○ 일부 수입품목에 대한 인도 표준청(BIS; Bureau of Indian Standards) 인증 요구
보건 및 안전 규제	○ 농산물 및 식품 수입시 까다로운 위생 및 식품위생 증명 요구
수출보조금	○ 수출촉진 자본재에 대한 저관세 수입 제도 ○ 수출용 원자재 관세유예 제도
지적재산권	○ 지적재산권 관련 법규는 강력한 편이나 침해율이 높고 보호 메커니즘 역시 허술(특히, 의약품, 화공 제품 분야에서 선진국의 불만이 높음)
정부조달	○ 소기업 고유품목 지정에 의한 입찰제한 ○ 중소기업에 대한 가격우대정책 ○ 자국기업 우대조치
투자 장벽	○ 불공정 관행 등에 의한 투자진출 억제 ○ 엄격한 노동조합 보호 장치에 따른 고용 문제 ○ 부동산 취득 및 사용제한, 과실송금 및 자금차입규제 ○ 현지부품 사용·수출의무 비율, 복잡하고 차등적인 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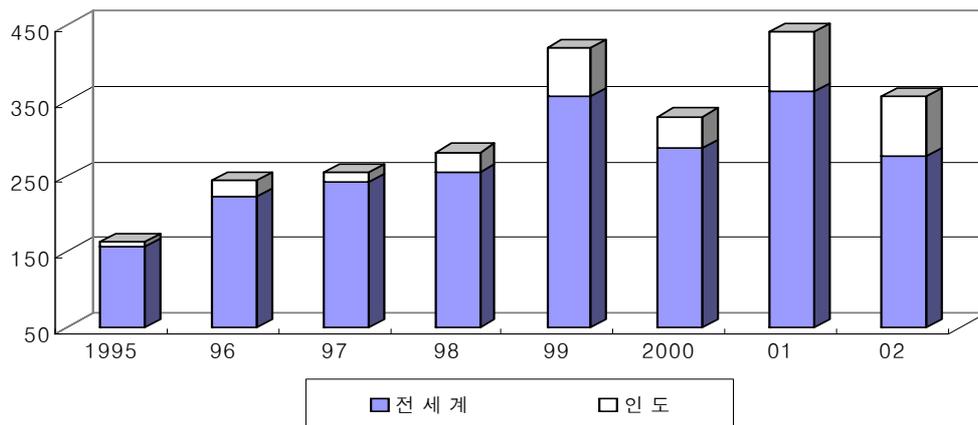
출처: 외교통상부, '2005년 외국의 통상환경'

미국 USTR, "2006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일본 경제산업성, "2006년판 불공정무역보고서"

또한, 인도는 외국제품에 대해 반덤핑을 이용한 수입규제를 많이 부과하고 있다. 미국 등과 함께 반덤핑 규제를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남용하는 국가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으며, 반덤핑 조사과정의 불투명성도 크게 비난받고 있다.

<그림 I-2> 인도의 반덤핑 조치건수 통계



한편, 노동법 개혁이 아직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경제 특구 등을 중심으로 외국인 기업에 한해 근로자 계약 및 해고의 자유, 근로시간 연장 등의 개혁안을 강구하고 있지만, 노동계의 반발로 쉽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좌파연합이 13개 공기업의 민영화 계획과 국영은행 주식의 51% 매각 등을 반대하여 정부의 개혁조치들이 기대이하로 지체되고 있다. 공공부문의 민영화 지연은 경제의 효율성을 저하시켜, 인도 경제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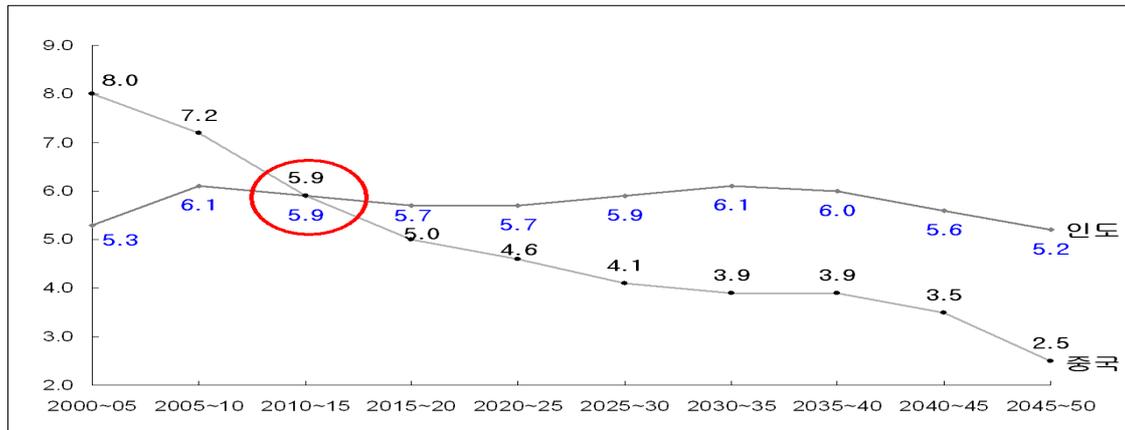
5. 향후 경제전망

가. 인도경제의 성장 전망

8% 이상의 고성장으로 세계 3대 경제대국 부상

골드만삭스 등 주요 경제전망 기관들은 인도경제가 향후 5~6%이상의 경제성장률을 지속하여 2030년경 세계 3대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인도가 2015년 이후 경제성장률면에서 세계 1위를 달성하고, 2032년에는 일본을 앞서 미국과 중국 다음으로 세계 3위의 경제규모를 가지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⁷⁾.

<그림 I-3> 인도와 중국의 경제성장률 전망(5년 평균, 단위 %)



자료 : Goldman Sachs, *Dreaming with BRICs : The Path to 2050*, Global Economics Paper No. 99, 2003.

도이치뱅크도 2020년까지 주요국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을 인도 5.5%, 말레이시아 5.4%, 중국 5.2%, 미국 3.1% 순으로 추정함으로써 인도의 급속한 경제성장을 전망하였다.

Global Insight도 또한, 인도와 중국의 세계 GDP 비중은 증가하는 반면, 미국과 일본의 비중은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7) 골드만삭스(2003, 2005)

한국은행은 인도의 경제규모가 2030년경 일본을 앞서기 시작하며, 2050년경 EU와 비슷한 세계경제의 12% 정도를 차지하는 경제규모를 갖게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한편, 인도정부도 우호적인 외부여건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2020년까지 8.5%~9.0%의 경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발전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⁸⁾ 즉, 2020년까지 고용창출, 빈곤 타파 및 균형발전 등을 도모하여 GDP 수준을 현재의 4배 수준으로 상승시킨다는 계획을 세우고 자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표 I-15> 주요기관의 인도 경제성장률 전망(단위: %)

구 분	단기(2006)	중기(2020)	장기(2050)
Goldman Sachs	6.2	5.8	4.9~5.7%대
Global Insight	5.6	5.4	
Deutsche Bank		5.5	
인도정부목표율	6.2	8.5~9.0	

자료: Goldman Sachs, 2005, Dominic and Purushothaman, 2004, Deutsch Bank Research,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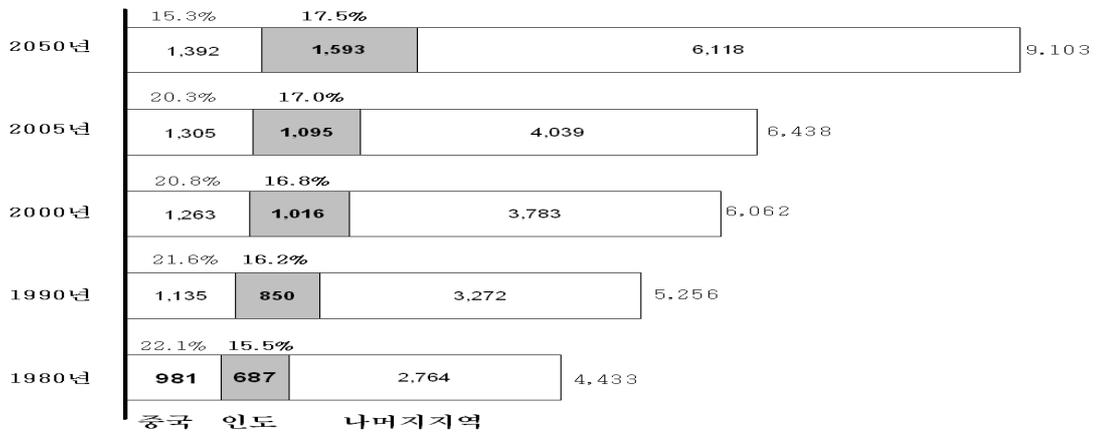
나. 장기 성장 요인

세계 최대의 생산가능 인구 보유

중국은 생산가능 인구(15~64세)가 2010년 이후 감소할 것이나, 인도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50년경 세계 최대의 생산가능 인구를 보유할 것으로 전망된다(World Bank). 이러한 인도의 풍부한 인력규모는 생산요소의 투입을 증가시키고, 소비기반을 확대시킴으로써 경제성장의 중요한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8) India Vision 2020

<그림 I -4> 주요국의 인구구조 추이(단위: 백만명)



자료 :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Database*, 각 년도. UN, *World Population Prospect : The 2004 Revision, Volume III : Analytical Report*.

생산가능 인구의 높은 비중은 부양률⁹⁾을 낮추는 동시에 저축과 투자를 제고시킴으로써 성장 잠재력을 확충시킬 것으로 보인다. 인도의 생산가능 인구는 2005년 6.9억 명에서 2030년경 9.9억 명으로 세계 최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2030년경 세계 생산가능인구의 18.5%가 인도에 거주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대적으로 젊은 인구통계학적 구조는 인도가 노동 집약적 산업에서 세계최대의 공급기지로 성장할 수 있는 주요 기반을 제공한다.

투자환경 개선으로 외국인 투자의 대폭 확대

외국인 투자관련 규제에 지속적인 개혁으로 외국인 투자가 안정적으로 증가함으로써 인도의 국제적인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AT Kearney의 2005년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도 인도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신뢰도가 중국 다음으로 세계 2위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그동안 인도정부의 노력으로 외국인 투자여건이 대폭 개선된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¹⁰⁾.

9) 비경제활동인구/경제활동인구

10) 2005년 FDI 투자 신뢰 선호도 지수면에서 중국 1위, 인도 2위, 미국 3위, 영국 4위, 러시아 6위, 브라질 7위, 한국 23위로 나타났다.

외국기업들의 인도투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외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인도로 투자처를 전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골드만삭스의 3억 3,000만 달러 투자, Benetton의 매장 100개 설치, IBM의 60억 달러 투자 등 지난 몇 개월 동안에 세계의 우수한 기업들이 인도에 새로운 투자계획들을 연속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또한, 포스코의 120억 달러, 현대자동차의 생산설비 확충 (20만대→60만대), 삼성전자, 엘지전자의 휴대폰 생산시설 확충 등 우리기업들도 인도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인프라도 2012년경 일정 수준 확보 가능

인도정부는 단일 고속도로망을 건설하기 위해 'National Highways Development Project(NHDP)'를 1,2단계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다. 또한, 총 7,300km의 동서남북 관통도로를 2007년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이외 '항만-고속도로 연계 강화사업' 및 NHDP 3, 4단계를 구상중에 있다.

또한, 수화물열차, 특급열차, 화물열차를 시속 100km 이상으로 운행하기 위한 철도개설 사업, 항만과 배후권 조성사업 등 다양한 운송경로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의 인프라 건설사업이 2012년 정도면 어느 정도 완결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인도의 내적 성장기반은 나름대로 기초를 갖추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절대적인 인프라 부족은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은 높다. 현재 미국과의 핵에너지 협력 강화 등을 통한 전력공급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10년 이내에는 공급이 수요보다 부족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전력문제는 쉽게 해결되기가 어려울 전망이다.

서비스업과 제조업 동반 성장도 가능

인도는 '제조업 서비스'육성으로 중국을 추월하려 하고 있다. 인도정부는 제조업 육성과 더불어 '제조업 지원 서비스'를 육성하여 중국을 넘는다는 '인도식 모델'을 추진하고 있다. 제조업 부문에서 대량생산에 의한 경제개발 방식인 중국모델 대신 SW와 고급 엔지니어링에 주력하는 제조업 지원 서비스 중심의 제조업 육성 모델을 채택하여 육성하려고 하는 것이다.

인도는 기술력, 언어능력, SW고급인력 등을 활용하여 제조업을 지원하는 제조업 지원서비스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¹¹⁾ 인도 부품업체 바랏포즈, 포장회사 에셀 등은 세계 주요 지역에 법인을 설립하여 현지에서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인도로부터 직접 제공받아 비용을 절감하는 방식으로 유도하여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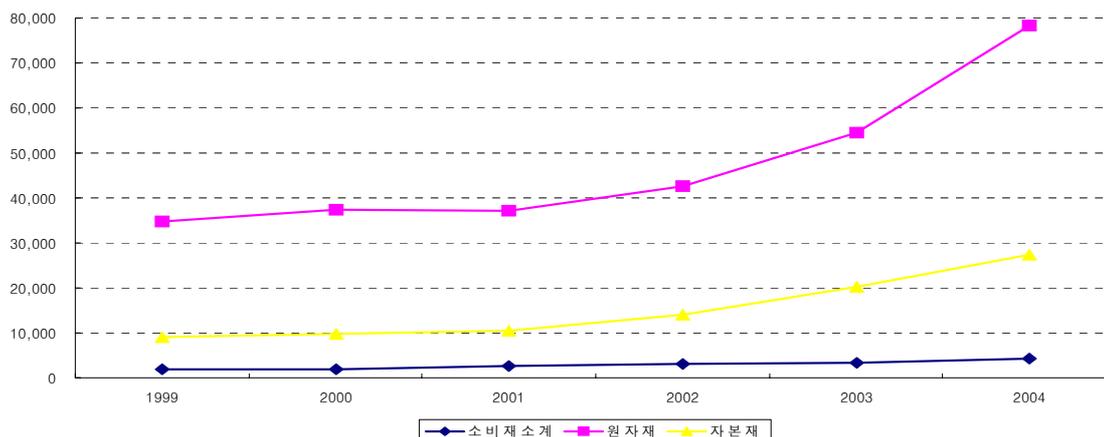
또한, 우수한 다국적 기업들이 풍부한 IT, BT인력을 활용하기 위해 아웃소싱을 인도로 집중하고 있다. BPO(Business Process Outsourcing), KPO(Knowledge Process Outsourcing), EPO (Engineering Process Outsourcing) 분야 등 고부가가치 산업들이 인도로 집중하는 추세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바, 이 분야들이 향후 인도경제를 더욱 견인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인도의 원자재와 자본재 수입이 대폭 증가하고 있는데, 인도는 향후 서비스업뿐 아니라 제조업도 나름대로 성장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지난 6년간 인도의

11) 맥킨지에 의하면 미국의 내구재 생산수입의 20%, 자동차, 컴퓨터, 의류 등 세계 제조업 총매출 15조 달러의 10~20%가 제조업지원 서비스 부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자본재와 원자재 수입현황을 보면, 원자재는 평균 18.7%, 자본재는 25.8%의 수입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제조업 성장의 물적기반이 다져지고 있다.

<그림 I -5> 인도 자본재/소비재 수입액 현황(단위 : 백만 달러)



주: 인도 회계연도는 4월부터 익년 3월까지임

미국의 인도와의 경제협력 확대 지속

최근 미국은 인도와 과거 냉전시대의 불편한 관계를 청산하고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IT인력 임시 비자발급, 50억 달러 차관 승인 등 미국으로부터의 다양한 혜택과 원조는 인도 경제성장의 밑거름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미국은 당분간 전략적 고려에 의해 인도를 지속적으로 지지하는 한편, 경제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 ①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구축 가능성 대비
- ②파키스탄의 카슈미르 분쟁, 핵전쟁위험 등 사전 차단
- ③ 중국을 견제하고 아시아에서 영향력 지속 등이 주요 요인이다.

양국간 협력관계의 강화는 인도에 대한 투자위험을 줄여 주어, 그만큼 인도에 대한 직접투자를 확대시키는 기회를 확대시키고 있다.

II. 인도경제 부상의 의미

1. 인도경제 부상과 우리 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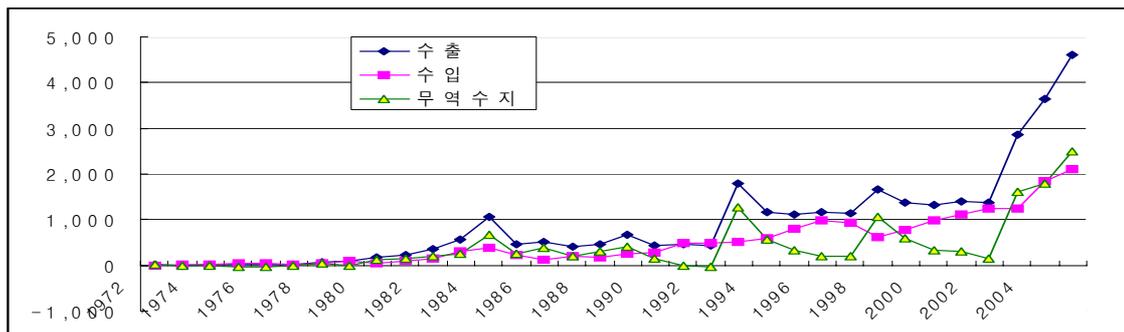
가. 시장으로서의 의미와 한계

(1) 신흥시장으로서의 역할

교역확대에 따른 인도시장 중요성 부각

우리나라의 대인도 수출은 최근 5년간 3.5배 증가한 반면, 수입은 2.1배 증가하였다. 인도에 대한 수출은 인도의 소비주도형 성장세에 힘입은 내구소비재와 투자 관련 자본재의 수출이 주도하였다. 2000년에 13억 달러에 머물던 수출액이 2005년에 46억 달러대로 대폭 늘어났다. 한편, 인도로부터의 수입도 또한 2004년 이후 큰 폭의 증가세로 전환하여, 2000년에 10억 달러이던 수입액이 2005년에 21억 달러로 확대되었다.

<그림 II-1> 대인도 수출입 및 무역수지 추이(단위: 백만 달러)



자료: 한국무역협회

양국간 교역 구조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휴대폰, 자동차부품, 철강판, 석유제품을 주로 수출하는 반면, 인도는 석유제품, 천연섬유, 철광 등을 주로 수출하는 상호보완적 수출구조를 보이고 있다.

<표 II-1> 한-인도간 교역품목 구조(MTI 3단위, 2005년 기준)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대인도 수출	금액	증가율	대인도 수입	금액	증가율
1	무선통신기기	1,170	40.1	석유제품	803	84.7
2	자동차부품	427	14.6	천연섬유사	222	-20.3
3	철강판	361	79.1	식물성물질	110	-69.2
4	합성수지	225	76.3	합금철선철·고철	109	48.4
5	석유제품	221	94.7	철강판	78	8.3
6	선박해양구조물·부품	186	-36.1	기타금속광물	73	58.9
7	전자관	97	4.1	정밀화학원료	66	15.9
8	원동기 및 펌프	83	-0.1	철광	49	-36.3
9	섬유 및 화학기계	83	60.8	원동기 및 펌프	48	149.8
10	기타기계류	79	38.5	동제품	41	49.9
	소계(비중)	2,932	(63.8)	소계(비중)	1,599	(75.7)
	총 계	4,598	26.6	총 계	2,112	14.2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인도는 인프라, 양질의 노동력 부족 문제 등으로 제조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고, 최근의 성장세 역시 IT서비스, BPO 등 서비스업 성장에 힘입은 바 크다. 우리나라로부터의 수입 역시 소비재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여 2000~2005년에 휴대폰, 가전제품 등 내구소비재 수출은 7배, 자동차 부품, 철강 등 자본재 수출은 4배, 원자재 수출은 2배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내구소비재의 대인도 수출비중이 11.5%에서 22.2%로 증가하였으며, 자본재 또한 33.9%에서 40.5%로 비중이 확대되었다.

한국의 대인도 수출 증가율이 인도의 對세계 수입증가율을 초과하고 있는 품목은, 휴대폰, 자동차부품, 고무, 컴퓨터 부분품, 철강판, 공작기계, 펌프부분품, 폴리에스테르, 알루미늄박, 철강관 등이다.

최근에도 인도경제의 성장세가 지속됨에 따라 내구소비재 수요(휴대폰, PC, 자동차부품 등)와 투자수요(철강, 기계요소 등)가 증가되어 우리나라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 이들 품목은 인도 내수가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제품이 경쟁력을 갖춘 품목으로서 향후 지속적인 수출확대가 기대된다.

우리 제품의 상대적 경쟁력이 낮아짐에 따라, 대인도 수출 증가율이 인도의 對세계 수입증가율보다 낮은 품목으로는 컴퓨터 기억장치, 칼라TV, 플라스틱제품, 정제 연, 철강제품 등이 있다.

한편, 인도시장의 전반적인 수요 확대에도 불구하고 중국산 제품 등과의 경쟁심화로 폴리에틸렌, 부타디엔고무, 폴리에틸렌, 공기조절기 등은 대인도 수출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

<표 II-2> 우리나라의 대인도 수출품목 분석(약진·부진 품목)

인도의 對 세계 수입증가세를 상회한 품목	인도의 對 세계 수입증가세를 하회한 품목	
	경쟁력은 약화되었으나 수출이 증가된 품목	급속한 경쟁력 약화로 수출이 감소된 품목
휴대폰, 자동차부품, 고무, 컴퓨터 부분품, 철강 관, 공작기계, 펌프부분품, 폴리에스테르, 알루미늄 박, 철강관 등	기억장치, 무선기기, 칼라 TV, 플라스틱제품, 정제 연, 철강제품, 정제 동, 유기화합물 등	부타디엔고무, 합성필라멘트직물, 플라스틱 성형주물, 폴리에틸렌, 공기조절기 등

양국의 무역통계를 근거로 실시한 현시 선호 비교우위(RCA) 분석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자동차부품, 전기전자, 기계류에 비교우위를 갖고 있으며, 가공식품, 화공제품, 철도, 선박 등도 시장개척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인도는 비금속광물, 의류, 곡류, 어류 등에서 비교우위를 보이며, 향후 철강, 고무제품, 유기 화학물 등도 시장개척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곡류, 어류

등 농수산물의 경우에는 양국민의 기호 차이와 물류부담 등으로 인해 당분간 수출입에 크나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표 II-3> (현시비교우위지수 분석에 따른) 한-인도간 교역확대 가능분야

구 분		우리나라	인 도
교역제품	높은 비교우위	자동차부품, 전기전자, 기계류	비금속광물, 의류, 곡류, 어류 등
	낮은 비교우위	섬유, 화공, 철강, 금속제품	섬유사, 직물, 모피
비교역제품	비교우위	일부가공식품, 철도, 특수선박, 오디오 등	철강, 고무제품, 유기화합물

주: 2003년 양국 무역통계 분석결과

자료: KIEP(2005), “인도의 대외 경제정책과 한-인도 경제협력 강화방안”

(2) 시장으로서의 한계

우리와의 경제협력 규모, 생산분업 측면에서 효과 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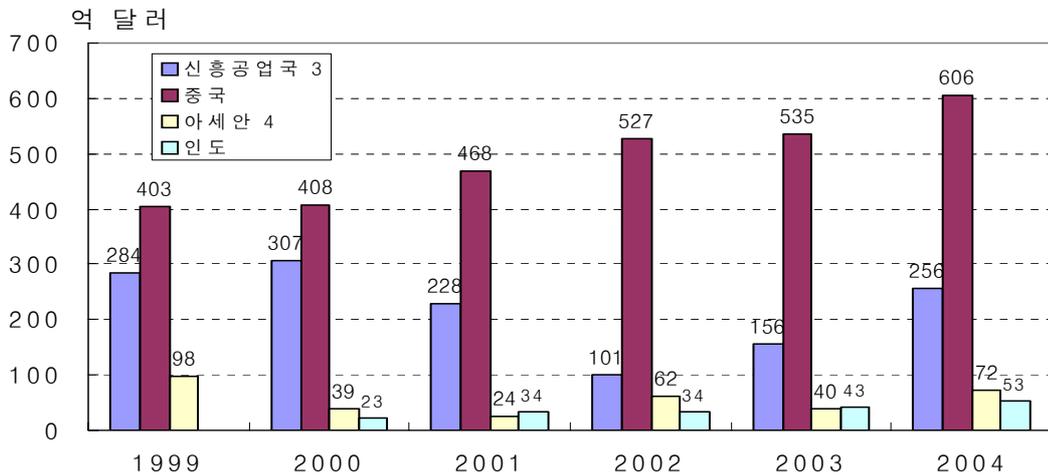
인도의 경제규모는 미국, 중국 등에 비해 작아 당장 우리나라와의 경제협력 규모가 대폭 증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인도의 GDP규모는 아세안보다 작으며 수입규모도 또한, 아세안의 20% 수준에 불과하다. 인도가 최근 소비 주도의 성장을 지속하면서 경상수지 적자가 대폭 확대되었는 바, 당분간 수입 수요의 증가에 제약이 되고 있다.

또한, 산업구조의 특성상 인도가 제조업 생산기지로 급속히 발전하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와의 생산분업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인도가 저렴하고 풍부한 노동력을 보유하고는 있으나 전반적인 근로자 수준이 여전히 낮고, 전력,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이 부족하여 외국인 직접 투자가 기대만큼 증가하지 않고 있다. 일부 부문의 소기업 보호제도는 규모의 경제가 가능한 기업의 진입을 막고 있으며,

경직적인 노동법이 변화되지 않아 기업 청산 등에 시간과 비용이 과다 소요되고 있다.

인도가 90년대 이후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아직도 규제와 과다, 제조업 정책의 부재, 노동자 보호정책 등으로 외국인들이 투자가 중국에 비해 활발하지 않다. 외국인의 대인도 직접투자는 2001년 34억 달러 수준에서 2004년 53.4억 달러로 소폭 증가하였으나, 아직도 중국 606억 달러의 1/11에 불과하다.

<그림 II-2>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액 추이 비교



자료: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04, 2005

한편, 양국간 제조업의 경쟁력 차이로 인한 무역구조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인도 수출은 2005년 46억 달러이며 수입은 21.1억 달러로 무역흑자 규모가 25억 달러 정도다. 우리나라의 대인도 무역수지 흑자규모는 일본 등의 대인도 무역수지 흑자 규모(일본 16억)에 비해 상대적으로 커서 양국간 통상마찰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 현재와 같은 비대칭적인 무역구조가 지속될 경우, 우리 기업들의 지속적인 대인도수출 확대가 한계에 부딪칠 가능성이 클 수 있다.

나. 투자처로서의 의미와 한계

(1) 내구소비재 중심, 대기업 위주의 투자처로 부상

대기업 중심의 투자

우리 기업들은 인도에 2006년 6월 현재 209건, 총 9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 인도 현지에 현대자동차, 삼성, LG전자 등 대기업 중심으로 총 150여개 국내업체가 진출해 있다. 이 중 대기업과 대기업 계열사가 약 50여개, 대기업 협력업체가 약 50여개 업체이고, 나머지는 중소기업이다.

우리 기업의 인도 진출은 대기업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대인도 직접 투자액을 보면, 2006년 6월말 현재 대기업이 89.7%를 차지한 반면, 중소기업은 9.1%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제조업 중심으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도 또 하나의 특징이다. 현재 신고건수 기준으로 제조업에 84.5%(76.3억 달러), 도소매업에 11.9%(1.1억 달러), 서비스업에 2.7%(0.2억 달러) 투자하고 있다. 대기업들은 자동차, 냉장고, 에어컨 등 내구소비재를 중심으로 인도 내수 소비시장을 선점하고 있다.

<표 II-4> 우리 기업의 대인도 투자 현황(단위: 건, 천 달러)

기업규모	신고건수	신고금액	투자건수	투자금액
합 계	240	1,558,217	209	903,813
기 타	42	16,247	40	10,136
대기업	65	1,401,132	51	811,044
중소기업	133	140,838	118	82,633

주: 2006년 6월 기준,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인도기업의 국내진출 현황

인도기업들은 우리나라에 1999년부터 매년 10건 이상, 평균 75만 달러 정도를 하였다. 2004년 이후에는 인도 대기업을 우리 시장 진출이 활기를 띄면서 투자가 크게 증가하였다.

2004년 3월 인도의 타타그룹(Tata Group) 계열사인 타타모터스(Tata Motors)가 대우상용차(Daewoo Commercial Vehicle Co.)를 1억 200만 달러에 인수하는 등 인도 기업들의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액은 2004년 1/4분기 동안 5,153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표 II-5> 인도의 대한국 직접투자 추이(단위 : 천 달러)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6
건수	11	13	20	14	16	30	68	33
금액	815	702	857	685	697	52,647	3,736	1,583

자료: 산업자원부 투자진흥과

또한, 최근 인도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IT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인도 기업들의 국내시장 진출이 확대되고 있다. IT서비스 업체인 타타컨설턴시서비스(Tata Consultancy Services, TCS), 인포시스(Infosys), 사티암 등이 국내에 진출하여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대우 일렉트릭의 경우 인도 비디오콘과의 매각협상이 성사단계에 이르고 있다.

내수소비재 시장 선점 극대화

우리나라 기업의 인도 투자 진출은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기업 중심의 선점식 투자, 적절한 브랜드 마케팅, 현지화 전략 등에 의하여, 인도시장에서 자동차 분야 2위, 백색가전 분야 1,2위 등 현대자동차, 삼성, LG전자의 독주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91년 인도 금융위기 이후 다국적 기업들이 중국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을 때, 우리 기업들은 일찍이 인도라는 거대시장의 잠재성을 인식하여 인도시장에 적극 진출하였다. 또한 인도 소비계층을 차별화하여 고급브랜드를 공급하였으며, 스포츠 스타와 인기 연예인 등을 이용한 제품 광고 등의 적절한 마케팅을 하였다. 현지부품 85% 정도 조달과 현지인 적극 채용 등 현지화 전략도 인도 투자 성공에 매우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

<표 II-6> 주요 3사의 대인도 투자 성과

기업명	연도	소재지	주요제품	성 과
삼성	1995	노이다 공장, 방갈로 연구소	컬러TV, 전자 렌지, 세탁기, 에어콘, 모니터, 냉장고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3년 컬러TV 22% 시장점유율 (평면TV 매출 275% 증가) ○ 2005년 매출액 10억 달러
LG전자	1997	노이다 공장, 방갈로 연구소	컬러TV, 세탁기, 에어콘, 냉장고, 핸드폰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4년 기준, 세탁기 30.8%, 전자 레인지 40.9%, 에어컨 35%, 모니터 32%, 단말기 55% 등 각 제품별 인도시장 내 시장점유율 1위 ○ 2004년 14억 달러 매출, 8천만 달러 수출

현대 자동차	1998	첸나이공장	소형차(상트로) 중형차(액센트, 소나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기 12만대에서 2002년 25만대 생산 ○ 2004년 13억 달러 매출 ○ 2007년 10월 30만대 생산 가능 제2공장 완공
-----------	------	-------	------------------------------	--

자료: 각 기업 공개 및 다양한 자료

(3) 투자처로서의 한계

중국, 아세안 국가에 비해 투자 매력은 뒤쳐져

많은 투자부문에서 향후 인도는 중국 및 동남아시아와 경쟁구도를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인도의 제조업 발전에 긴요한 외국기업은 동아시아(일본, 한국, 대만 등) 국가의 기업들이다. 그런데, 동아시아 기업들은 현재 투자대상국으로 중국과 아세안 국가를 선호하고 있다. 동아시아의 생산을 선도하는 동북아 기업들에게 중국은 여전히 가장 좋은 투자지역이다. 현재 중국내부나 동북 3성이 중국 연안지역의 대체 투자지역으로 등장하여 투자처로서 인도와 경쟁하고 있다.

또한, 아세안 국가들과의 경쟁관계를 살펴보면, 전통산업은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전자산업은 태국이 경쟁자가 될 것이다. 동남아시아의 경우 일본이나 구미기업의 20년 이상에 걸친 투자에 의한 생산거점이 이미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인도가 아세안 지역과 FTA를 추진하자 인도에 진출한 외국기업이 오히려 인도에서 철수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일본의 소니사의 경우 인도-태국 FTA로 인해 인도의 전자제품 관세율이 인하되자, 인도 현지에서의 TV조립을 중단하고, 싱가포르에서 생산된 브라운관을 태국에서 조립한 후 인도에 수출하고 있다.

다. 자원 · 과학기술의 보완성

부존자원, 과학기술 분야 등에서 상호 보완관계 형성 가능

인도는 철광석 등 부존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주요 자원공급지로서 중요한 역할이 기대된다. 또한, 저렴한 노동력과 함께 경쟁력이 높은 인도의 IT 소프트웨어 분야가 우리나라의 고도화된 하드웨어 기술과 상호보완적 관계를 구축한다면, 양국간 기술협력은 막대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LG, 삼성 등 대기업은 인도내 R&D센터 운영 등을 통해 인도의 우수한 IT인력을 활용하고 있다. 현재 휴대폰 3G 기술개발 등에서 인도 IT인력의 활용도가 점차 높아져 가고 있으며, 인도 현지 R&D센터도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경우 인도 IT산업 활용을 위한 진출이 거의 없는 상태다. 최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중소기업 對인도 투자동기 조사결과에 따르면, 인도 진출 65개 중소기업 중 인도의 IT산업 활용을 위해 진출한 업체는 하나도 없었다. 대부분 기업이 현지 내수시장 진출, 저임금 및 노동력 활용 목적으로 인도에 진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선진국들은 인도 IT산업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이중 미국 기업이 산업간, 기업간 협력에 가장 적극적이다. 미국 500대 기업 대부분이 인도 IT기업의 주요 고객이다. GE의 경우, GE 프로젝트 발주분이 인도의 유명한 IT회사인 TCS, Wipro, Infosys 연간 매출액 15%, 50%, 30%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ITES(IT Enabled Service)-BPO(Business Processing Outsourcing)부문도 활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며, 질적으로도 활용수준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보험, 카드 등 소매금융의 단순 콜센터 역할에서 벗어나 제약, 통신, 자동차, 항공운수업 등으로 그 활용영역이 넓어지고 있으며, 활용수준도 법률 및 보건 자문, 의료처방 지원, 금융 분석, 정밀장비 온라인 A/S 등으로 심화되고 있다.

한편, 동아시아 국가들도 인도의 IT산업 활용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일본은 정부차원에서 양국간 IT기술 상호협정을 체결하는 등 중장기적 협력관계 구축에 적극적이다. 싱가포르는 1990년대 후반부터 인도 IT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방갈로르에 IT파크를 건설하는 한편, 약 500여개의 인도 IT기업을 유치하였다. 중국도 인도의 앞선 SW기술을 활용하기 위해 인도의 IT 고급인력 영입계획을 발표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표 II-7> 중국, 일본 등의 인도 IT산업 활용사례

일 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급 IT기술인력에 대한 출입국 규제 완화 ○ 양국간 IT기술 상호인정 협정 체결 ○ 양국간 협력센터 인도 첸나이에 설치 ○ 일본상공회의소, 방갈로에 어학원 설치 및 어학 지원
싱가포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분출자를 통해 방갈로르에 IT Park 등 건설 ○ 양국 통신회사간 대규모 공동투자 사업 추진중 ○ FTA추진단계에서부터 IT산업을 집중협력 분야로 선정 ○ 싱가포르가 유치한 1,000여개의 인도 기업중 절반이 IT기업임.
중 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 NIIT 등 유치, 북경대 등 중국 전역 100여개 대학에 교육센터 설치(현재까지 약 3만명 인력 배출) ○ 고급 IT인력 유치 위해 정착금 및 주택 지원 ○ 강소성은 400여명의 고급 IT인력 영입 계획 발표

라. 중국의 보완시장으로 활용

중국의 보완시장으로 활용하여 차이나 리스크를 감소시키되, 장기적으로 중국과 함께 전략적 협력관계 구축

현재 인도경제의 발전단계와 경제규모를 감안하면, 인도는 중국을 보완하는 시장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인도의 경제수준은 중국과 약 10~15년의 격차가 있어 단기간내에 중국을 대체할 만한 시장으로 발전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인도경제의 성장이 본격화되고 중산층의 내구재 소비 또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대량 생산형 조립제조업의 판매시장과 생산기지로써 유망하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對인도 교역과 투자규모는 對중국 교역 등에 비해 초보단계이며 양국간 협력 수준이 낮을 뿐 아니라, 인도 내부적으로 사회간접자본 미비, 규제 과다, 제조업 기반의 취약 등 다양한 문제가 상존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인도를 중국을 보완하는 시장으로 삼아 차이나 리스크 등을 최대한 감소시키되, 장기적으로는 POST-중국의 역할도 고려하면서 양국간 협력 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향후 중국 등의 인건비 상승 등 제조비용 증가 등으로 산업기지가 중국 등 동아시아에서 인도로의 이전이 본격화되면 인도는 제조업이 더욱 발전할 것이며, 중국과 함께 세계의 공장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현재의 추세가 유지 된다면, 2030년경에 이르면 인도는 미국, 중국에 이은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나라 입장에서 인도는 중국과 함께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경제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시켜 나가야 할 시장이다.

차이나 리스크 (China Risk)

우리 경제의 대중 의존도가 급속히 진전되면서 중국의 정치·경제·사회적 리스크에 우리 경제가 쉽게 노출되어 있다. 중국의 고도성장과 함께 우리 기업의 투자 증가로 대중 수출이 1991년 10.3%에서 2000년 21.6%, 2005년 31%로 증가하면서 중화경제권은 우리 경제의 최대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우리의 제조업 해외투자중 약 60%정도가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의 투자 비중도 2001년 15.4%에서 2004년 60.3%로 급증하였다.

대중 수출의 상당부분이 미국 등 역외지역으로 재수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대외경제 여건변화가 우리나라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중국의 경우 대미 수출의존도가 높은 만큼, 미·중국간 경쟁과 알력, 급격한 위안화 환율변동 등으로 인한 경기변동은 우리 경제에 상당부분 전가되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핀란드 경제가 구소련 붕괴후 심각한 타격을 입은바 있고, 2001년 9.11테러 이후 멕시코 경제가 큰 타격을 입었던 데에서도 이를 잘 알 수 있다.

또한, 중국이 우리의 경쟁국과 FTA를 체결한다면 우리의 수출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중-아세안 FTA는 중국시장에 대한 우리의 수출경쟁력을 저하시킬 것으로 보인다.

Ⅲ. 우리의 대응방안

1. 기본 방향

1	인도 거대 내수시장 진출 확대
---	------------------

인도는 거대한 내수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나, 산업구조상 제조업이 취약하고, 인프라 부족과 독특한 상관습 때문에 다국적 기업의 진출이 힘든 시장중 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는 우리 기업들이 중국과 일본을 앞서 제조업 분야에서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이다.

최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 기업들의 외국시장에 대한 주요 진출목적은 인도의 경우 내수시장 진출, 중국의 경우 생산요소 추구(+내수시장), ASEAN은 생산요소 추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국과 ASEAN에 대해서는 우리와의 수직적 분업관계 모델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인도에 대한 진출 전략은 분업관계 모델보다는 거대 소비시장의 잠재성을 적극 활용하기 위한 내수시장 추구 모델이 적합하다.

더욱이 중국은 값싼 노동력에 의한 세계 공장으로서의 활용가치가 높은 반면, 인도는 제조업이 취약하여 소비재와 자본재에 대한 초과수요가 발생하므로 거대소비 시장으로서의 잠재적 가치가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 기업은 인도에 생산시설 투자수출과 주요 부품수출 등을 확대하는 전략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인도시장 진출은 중국시장 진출시 우려되는 부메랑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고, 오히려 국내의 생산성 확대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우리 기업들의 급속한 해외시장 진출에 따른 국내 시장의 공동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도 중국에 비해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양국간 보완적 산업구조 활용 극대화

양국간 교역 및 산업구조는 상호 보완적이라서 양국간 산업협력이 이루어지면 시너지 효과는 큰 반면, 산업구조조정 효과는 적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기계, 자동차, 전자, 화학, 섬유 분야 등 하드웨어 부문과 하부산업(Down Stream) 부문에 강점이 있는 반면, 인도는 자원, 재료 등 원자재 공급지로서, 그리고 소프트웨어 제공자로서의 활용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예를 들면, 인도는 세계 최대의 면과 면사 생산지이면서, 세계적인 수준의 의류디자인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연료광물 4종, 비금속류 50종, 기타 22종 등 총 86종을 보유한 세계 주요 자원보유국이다. 광물의 생산규모면에서 운모류 1위, 철광석 5위, 보오크사이트·망간광 6위, 석탄 5위 등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인도정부는 광물 개발에 있어 직접투자 규제를 완화하고 있어 향후 자원개발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양국간 자원협력은 매우 유망한 분야이다.

또한, 양국간 수출경쟁에서 단지 8.8% 정도의 품목에서만 경쟁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양국간 교역경쟁 관계는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KIEP). 산업간 교역지수¹²⁾가 인도와 중국간에는 10% 수준인데 비해, 우리나라와 인도간에는 35%로서 상대적으로 자국 산업내 경쟁우위가 높은 제품을 주로 교역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12) 산업간 교역지수는 두 국가간 상호교역에 있어서 교역품목의 상이한 정도를 나타내주는 지수로서, 0에 가까울수록 산업내 교역이 크고, 1에 가까울수록 양국이 각 산업에서 같은 품목을 수출하여 교역경쟁이 높은 것을 의미함.

양국간 분업체계의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하기 위한 방향으로 우리 기업들의 인도 시장 진출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3 인도 선진 기초과학 시스템 분야와의 협력 확대

우리나라가 중국과 일본 등과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다방면에 걸친 과학과 기술 역량의 확보가 필요하다. 인도는 기초 과학과 IT SW 분야뿐 아니라 우주 프로그램(위성, 미사일, Ground System)에서도 세계적인 수준이다. 즉, 디자인, 위성발사, 추적 및 통제, 정보수집, 분석능력, 위성 원격관측개발 능력 등에서 세계적인 수준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인도는 BPO, ITES분야에서 세계 최대의 아웃소싱 국가이다. BT 분야에서도 임상실험 환자의 가용성이 세계 최대이고, Generic(복제 약품) 의약 분야는 세계시장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저렴한 인건비와 임상실험비로 인해 인도에서는 신약개발비를 최소 10% 이상 절감할 수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러한 비즈니스 환경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세계 유수의 의약회사들은 인도 시장에서의 진출을 더욱 확대해 나가고 있다.

선진 다국적 기업의 인도 R&D 시장진출, 기술 전수 및 신기술 개발 등으로 인해 인도에 대한 기술 파급효과는 거대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입장에서 인도와의 기술 협력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4 인도의 우수한 인력 적극 활용

인도는 IT, BT, 기초과학 분야에 세계 최고의 과학 및 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IT, 제약, 식품, 우주항공 등의

분야는 인도의 주력산업이면서 또한 거대한 인력시장이다. IT 분야의 경우 '85년 1만명에서 2002년 50만명으로 증가하였고, 매년 13만명 이상 인력을 배출하고 있다. BT분야도 매년 박사급 인력을 3,000명 정도 배출하고 있다. 또한, 인도는 핵무기는 물론 장거리 탄도체 기술을 보유한 우수한 기초과학 인력들이 매우 많다. 따라서, 인도와의 적극적인 인력협력을 통해 우리 기초 및 응용과학기술 역량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2. 부문별 협력확대 방안

① 투자진출 확대 방안

가. 기업진출 방안

1	협력업체를 동반한 대기업 중심의 전략적 진출
---	--------------------------

최근 인도경제의 투자 환경에 나타난 변화는 다음과 같다. ① 전력, 도로, 항만 등 인프라의 부족을 개선하기 위한 건설 사업이 확대되고 있다. ② 낙후된 제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이 확대되어, 제조업 분야에 대한 사업기회가 증가하고 있다. ③ 해외 거주 인도인의 본국으로의 송금 증대, S/W산업 등 지식산업 성장에 따른 소득증대 효과로 국내 소비가 급증하고 있다. ④ IT, BT 등 지식산업분야에 다국적 기업의 진입확대로 시장에서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그러나, 열악한 인프라와 유통망, 방대한 국토로 인해 마케팅과 유통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규모의 경제와 정보 접근성을 갖춘 업체들이 아니면 인도에 진출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규모의 경제와 정보의 접근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비교우위가 있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미 인도의 자동차, 백색가전 분야에서 현대자동차, 삼성, LG전자 등 우리 대기업들이 인도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상황 이므로 유관 중소기업이 진출하기 위한 토대는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대기업이 협력 중소기업체를 동반하여 인도 시장에 진출하는 경우 많은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진출사례를 보아도, 인도에 단독 진출한 대기업들에 비해 협력업체와 동반 진출한 대기업들이 보다 나은 경영

성과를 달성하였다. 대우자동차와 현대자동차는 좋은 사례이다. 인도에 단독진출한 대우자동차는 실패하였으나, 협력업체를 동반하여 인도에 진출한 현대자동차는 성공하였다.

현대자동차는 협력업체들을 통해 안정적인 부품 공급, 부품 품질 유지, 원가 절감 등을 도모함으로써 현대자동차가 소비자의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에 반해, 대우자동차는 현지 인도기업으로부터 부품을 직접 공급받는 방식을 택하였다. 그런데, 대우자동차에 부품을 공급하는 현지 기업들이 부품을 불규칙적으로 공급하여 생산 일정에 차질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았고, 품질이 낮은 부품을 공급하여 자동차 고장의 빈번한 발생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표 III-1> 대기업의 인도 진출사례 비교

구 분	현대자동차(성공)	대우자동차(실패)	비 고
단독/합작	단 독	합 작	
협력업체	동반 진출	희망기업 자율	고품질 부품 안정공급, 비용절감
진출지역	남인도 첸나이 (드라비디안 족)	북인도 델리 (아리안 족)	북인도 상대적 근로의식 결여 및 잦은 파업
타깃시장	1,000 cc 상트로	1,500 cc 씨에로	인도 구매력 과대평가
고급화	전자제어 엔진		배기가스 : 유로1, 2 기준통과

현대자동차 성공 요인

◇ 단독투자를 통한 의사결정의 신속성 확보

현대자동차는 인도의 시장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단독투자를 추진하였다. 단독투자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현대자동차는 인도 총리를 직접 설득하여 대규모 투자, 높은 현지화율, 적극적인 기술이전 등을 약속하고 단독투자 허가를 받아내었다. 단독투자는 현대자동차의 강점인 신속한 의사결정과 사업 추진을 발휘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

◇ 현지 조달비율 높여 원가 경쟁력 제고

높은 관세율(27~42%)와 루피화 약세로 인해 부품 현지화율을 높이는 것이 원가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조건이었다. 그러나, 높은 관세율로 보호를 받아온 인도 부품 산업은 영세하고 기술 수준이 낮아 부품현지화가 품질저하로 이어질 위험이 컸다. 그래서, 현대자동차는 높은 수준의 품질이 요구되는 고가 부품에 대해서는 국내 협력업체와의 동반 진출을 적극 유도하고, 그 외 부품은 현지업체로부터 직접 조달하는 전략을 채택 하였다. 현지 납품업체를 공장 인근에 위치하도록 해 물류비용을 줄이고 납품 지연을 방지했으며, 외국업체와의 기술 제휴를 주선하기도 했다. 아울러, 싱글소싱(Single Sourcing)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장기적 거래관계를 구축해 품질수준 제고를 유도하였다.

◇ 현지 시장상황과 소비자 니즈를 반영한 마케팅 전략 추진

첫째, 경쟁업체들이 중형차 시장에 먼저 진입해 고전했던 것과는 달리 현대자동차는 수익률은 낮더라도 수요가 많은 경차 시장에 먼저 진입하였다. 당시 경차 시장은 대금을 선납하고도 6개월 이상을 기다려야 할 정도로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둘째, 최신 모델을 출시하였다. 선발 해외 자동차업체들은 제품 수명이 다한 구식 모델을 들여와 자존심이 센 인도인들에게 외면 받았다. 현대자동차는 진출 당시 가장 최신 모델이었던 아토스(현지명 샹트로)를 시작으로 베르나(현지명 엑센트), 쏘나타, 투싼 등 최신 모델을 계속해서 출시하였다.

끝으로, 현지 도로와 교통 환경에 적합한 제품을 생산하였다. 고온다습한 기후를 고려해 엔진 쿨링 기능과 에어컨디셔너 성능을 강화하였다. 또한, 중앙선이 없는 2차선 도로, 보행자들의 빈번한 무단횡단, 차도로 지나다니는 소 등으로 인해 도로가 혼잡한 점을 감안해 경적과 브레이크 기능을 강화하였다. 그리고 인도에서는 모든 좌석에 승객을 태워 과적 비율이 높고 도로 포장률이 낮다는 점을 고려해 서스펜션을 보장하였다.

◇ 노무·인사 관리의 적극적 현지화 추진

공장에 소규모 사원을 운영하는 등 민족적 자긍심이 강한 인도인들의 문화를 최대한 존중하였다. 카스트 제도로 인한 조직 내부 갈등을 능력 위주의 인사와 공정한 대우를 통해 해결하였다.

또한, 이른 출근으로 아침 식사를 거르는 직원 들에게 아침 식사를 제공하고 급식의 질을 높이는 등 사소한 점에서도 직원들을 배려하는 관리를 통해 안정된 노사관계를 정립하였다. 이외에 관리자를 육성하기 위해 후보자들을 울산 공장에 불러 들여 관련 기능, 지식, 현대정신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인도기업들은 대부분 카스트 공동체를 기반으로 형성되어 있어, 기업경영 활동이 카스트 공동체에 의해 운영되어진다. 잘못된 경영활동은 공동체의 운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인도기업들은 카스트 공동체의 유지보호를 위해 신중한 결정을 하느라 의사결정기간을 과도하게 소비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새로운 투자의 결정에는 매우 조심스럽다.

그러므로 인도 기업과의 합작형태로 진출한 기업들은 사업 파트너인 인도 기업의 기대이상의 느린 의사결정으로 업무와 투자결정에 있어 상당한 지장을 받고 있다. 심한 경우 인도 파트너 기업이 투자결정시 시간을 과다 소요하여 적절한 투자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발생한다. 더욱이 우리 기업의 자체적인 시장조사에 의해 투자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사업이 인도 파트너 기업에 의해 거절되어 유망투자 분야에 투자를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도기업과 합작 투자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공격적인 투자는 거의 불가능하고, 모든 경영활동이 과도하게 지연되어, 효율적인 경영활동을 하기가 어렵다.

포드 자동차와 인도 마힌드라와의 합작 투자건이 합작 투자에 따른 폐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포드 자동차는 인도 마힌드라와 합작하여 인도 자동차산업에 투자를 하였다. 투자초기 인도 파트너 기업의 투자결정 지연으로 인해, 현대자동차보다 투자를 약 1년 먼저 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고, 생산은 현대자동차보다 10개월 정도 늦었다. 이에 따라, 포드자동차는 인도의 주요 시장인 소형차 분야에서 현대 자동차에게 선점을 당하게 되었고, 현재에도 경영상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당초 합작형태로 인도에 진출하였던 포드, IBM, 도요타, 대우 자동차 등 대부분 다국적 기업들도 현재는 단독 투자로 전환하였다. 이는 인도에서의 합작투자는 단독투자에 비해 어려운 점이 많으므로, 단독투자 전략으로 전환하여 인도시장을 공략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자체적인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3

주력업종에 따라 북부/남부지역으로 진출

인도의 주요 경제지역은 남인도와 북인도이다. 그러나, 두 지역은 경제적·사회적으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업종에 따라 투자 지역을 달리 선택하여 진출할 필요가 있다.

북인도 지역의 근로자들은 대개 나태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노조파업을 빈번히 일으킨다. 하지만, 북인도인은 무역에 강하다. 이에 반해, 남인도인들은 북인도인들에 비해 근면하며, 엔지니어링 (Engineering) 부문이 강하여 제조업 진출이 용이한 편이다.

또한, 향후 인도가 동아시아 지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면, 인도의 동남부 지역이 보다 유리한 진출여건을 제공할 수 있다. 특히, 제조업 중심으로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은 동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이유로는 첫째, 동남부 지역이 부품 조달, 다른 기업과의 협력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점이다. 둘째, 첸나이에 진출한 현대 자동차, 오리사주에 진출할 POSCO 등 기존에 진출한 대기업과의 연계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셋째, 인도가 동방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동아시아 지역과의 산업 분업이 증가하고, 생산 네트워크가 형성된다면 동남부 지역이 인도경제의 중심축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POSCO 제철소 진출사례

◇ 추진현황

포스코는 철강시장으로서 성장 잠재력이 크고 철광석 매장량이 풍부한 인도 오리사주의 Jagatsinghpur (Paradip) 지역에 3단계 (당초 예정: 광산탐사권 획득·부지매입 완료 '06, 착공 '08, 완공 '10)에 걸쳐 총 12백만 톤의 '일관 제철소' 건설(투자비 총 120억 달러, 광양제철소 규모)을 위하여 연산 4백만톤 규모를 생산하기 위한 1단계 투자를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전용항만, 철도 등 인프라 건설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다.

◇ 추진상 애로점

POSCO를 포함한 지역기업들이 신청한 40여개의 광권탐사권 (PL)에 대하여 오리사 주정부는 주민들과 NGO들의 눈치를 보느라 광권에 대한 심의가 늦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당초 계획보다 광산 개발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유지 매입은 원활히 진행되고 있는데 반해, 사유지 매입은 주민이주, 보상 등의 문제로 애로를 겪고 있다.

◇ 필요조치 사항

광산탐사권 획득 지연, 부지매입 애로 등의 문제는 POSCO에 많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향후 POSCO 일관 제철소의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한 인도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이 요구된다.

SEZ(Special Economic Zone, 경제자유 특별구역) 승인, POSCO의 철도건설 지분 참여 등 일부 진전사항이 있으나, 예정된 완공시기를 맞추기 위해서는 주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인도시장은 비록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아직도 최빈국으로서 선진 시장보다 시장규모는 작고, 또한 소비수준도 낮다. 하지만 대국적 성향으로 품질은 고급제품을 더 선호한다.

90년대 다국적 기업들은 소형차보다는 중형차 중심으로 인도시장에 진출하였으나, 수요부족으로 대부분 실패하였다. 하지만, 현대자동차는 중형차보다는 1000cc급 자동차를 생산하였다. 또한, 엔진 등의 품질고급화로 제품을 차별화하였다.

또한, 인도정부가 제시한 새로운 배기가스 기준¹³⁾을 현대자동차의 산트로와 대우자동차의 마티스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차종들이 충족시키지 못했다. 현대자동차는 고급화에 의한 제품 차별화를 통해 인도시장에서 급부상하게 됨으로써 현재 제2위의 자동차업체로서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이외 인도의 공업화 과정에서 필요한 석유화학, 철강 등 소재부문과 건설 자재 등 내구소비재 소비 증가에 따라 파생 효과가 크게 발생하는 분야로의 진출도 고려해볼 만 한다. 특히 시멘트, 타이어, 전자부품 등의 투자 기회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벤처캐피탈을 조성하여 인도의 제약, 소프트웨어 분야의 지분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장기적으로 경영에 참여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표 III-2> 우리 기업의 투자유형(인도 vs 중국) 비교

사업유형	인도	중국
대기업	○	○

13) 1999년 4월 인도 대법원이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수도권에서는 배기가스 유로1, 유로2 기준을 통과한 차량만 판매하도록 결정하였다.

한국 대기업 부품 공급 업체	○	○
외국 대기업 부품 공급 업체	×	○
위탁생산 업체 (OEM)	×	○

나. 정부 지원

1

인도 전문인력 양성, 정보서비스 센터 설치

우리 기업들의 인도 진출이 확대됨에 따라 인도지역 전문가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인도에 대한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현재 우리 기업들이 인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 기업들이 인도 진출 시 겪고 있는 애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도의 비즈니스 환경, 상인 카스트 등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계약과 협상시 손해를 자초하고 있다.

둘째, 우리 기업들의 인도시장 진출 실패는 기업경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보다 투자초기의 정보부족으로 인한 방향 설정의 착오에 기인하는 경우가 보다 많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셋째, 인도기업의 경영 문화에 대한 이해부족과 인도 파트너 기업에 대한 사전조사의 불충분 등으로 인도기업과의 마찰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네째, SW산업은 우리측의 인도인 활용능력 부족으로 글로벌 차원의 협력기회가 상실되는 등 인력활용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약 5년 전만 해도 우리와 협력하려던 인도 S/W 기업들이 이제는 우리기업을 협력 상대로 고려하지 않고 있을 만큼, 현지 여건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어려운 시장여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도에 대한 전문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더욱이 대부분 중소기업 들은 전문인력을 양성할 여력조차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인도지역 전문가를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양성·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특수대학 또는 국책연구기관을 통해서 인도 전문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현재 6개 대학에 국제대학원이 운용되고 있는 데, 이를 인도 전문인력의 양성소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국책연구기관내에 인도전문연구센터를 설치 또는 확대운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만하다. 이외에 인도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특성화 대학을 선정하여 학과 신설 등의 지원방안도 하나의 방안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인도는 카스트라는 특수한 계급사회에 의해 기업이 형성되고 운영되어지고 있다. 인도는 18개의 공식언어, 헤아릴 수 없는 지방언어와 종교 등 다원적인 사회·문화를 가지고 있다. 특히, 28개 주정부는 정책과 제도를 중앙 정부와는 달리 운영하고 있어, 우리 기업들은 제도와 정책을 제대로 파악하는데 애로가 큰 실정이다.

현재는 인도전문 연구 인력이 부족하여 기초적인 정보 수집과 분석조차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인도 전문 정보서비스 센터를 설립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새로운 인도전문 연구센터를 설립하든지 또는, 기존의 국책연구기관의 지역연구센터를 확대·운용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중국과 같이 인도현지에 연구센터를 설립하여 인도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에게 생동감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인도경제의 잠재력을 이용하기 위해 일본과 중국이 인도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다. 우리 기업과 제품들이 중국, 일본 등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FTA를 조기에 체결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인도와는 3차에 걸친 CEPA협상을 진행 중이다. 상품, 원산지·통관, 서비스, 투자, 분쟁해결 등으로 나누어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상품협상에서는 인도의 개방 수준이 과거 싱가포르와의 CECA 협정 때보다 훨씬 높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인도가 수입규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반덤핑 철폐에 대해 인도측이 여전히 소극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인도-태국, 인도-ASEAN FTA 협상 때와 마찬가지로 인도측은 원산지기준으로서 細番 변경기준과 역내 부가가치 40%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품목별 원산지규정 체제를 유지하고 있어 양국간의 합의점 도출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인도 측은 자국의 제조 기반이 약한 점을 의식하면서 중국 등 저가제품의 우회 수입을 크게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인도측은 우리나라에 대한 인력진출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우리 측의 출입국 관리 등 규제 완화 등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 당초 인도와의 CEPA 협상은 2007년 말까지 최종 합의를 이룬다는 목표를 갖고 있었는데, 현재의 상호존중 분위기가 지속될 경우 합의를 상당기간 앞당길 것으로 기대된다.

한중일의 대인도 FTA 협상에서는 한국이 한 걸음 앞서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와 인도는 2004년 8월에 공동연구를 마치고 CEPA 협상을 진행중인데 비해, 일본의 경우 2006년 7월에 인도와의 공동연구를 마친 다음, 양국 정상회담을 통해 2008년에 체결을 목표로 협상 개시에 합의한 바 있다. 양국의 공동연구 보고서에서는 FTA를 통한 투자 및 교역 확대와 함께 IT분야 협력, 인적교류 확대, 인도의 인프라 구축 협력, ODA(정부개발지원) 역할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현재 인도와 일본 간의 교역은 2005년에 68억 달러 수준으로, 같은 기간의 한-인도간 교역액과 비슷한 수준이다. 인도는 일본에 대해 보석, 철광석, 새우 등을 주로 수출하고, 일본은 인도에 대해 기계부품, 전자제품 등을 주로 수출하는 교역구조로, 한국-인도간의 교역과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다.

일본의 대인도 투자는 2004년 누계 25억 달러로, 모리셔스, 미국 등에 이어 3위를 차지한다. 그러나, 이는 일본의 경제규모를 감안할 때는 매우 작다고 평가된다. 인도의 자동차, 전기전자 분야에서 우리 기업과 일본 기업은 치열한 경쟁 관계에 있으며, 인도 진출 역사가 짧았던 우리기업의 선전으로 일본의 투자확대 등 시장전략 재편을 가져오기도 했다.

중국의 경우 인도에 대해 FTA 체결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으나,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급증세에 경계감을 갖고 있는 인도는 이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 중국과 인도간에는 현재 투자촉진협정(BIPA) 협상이 진행 중이며, FTA의 협상 단계로는 진전되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한 · 인도 CEPA 경제적 효과

- 한 · 인도 CEPA가 체결되어 관세가 철폐될 경우, 23억 달러의 무역수지 개선효과(對인도 수출은 28억 달러, 수입 5억 달러 증가)가 기대되며 GDP는 1조 3천 억원, 1인당 국민소득은 3만원 증가, 4만 7,600명의 고용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2004년 기준)

* 2004년 교역량이 55억 달러에서 2008년까지 연간 교역량 100억 달러로 증가될 전망(2004.10월 한 · 인도 정상회담시 양국정상 공약사항)

- 품목별 영향을 살펴보면 수송장비(11억 달러), 섬유 · 의류(4억 달러), 기계(3.5억 달러), 화학공업(3억 달러), 금속(2.6억 달러) 순으로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초산업(광물, 농수산물), 섬유와 의류, 화학공업 등에서 5억 달러 내외의 수입증가 예상

< 한-인도 CEPA의 경제적 효과 (KIEP, 2004년 기준) >

구 분	FTA 체결전 (2004년)	FTA 체결후 금액		
		금액	변동액	
국내총생산(GDP)	778조4천 억원	779조7천 억원	↑1조3천 억원 (0.17%)	
1인당 국민소득	14,162 달러 (1,620만원)	14,186달러 (1623만원)	↑24달러(3만원)	
가구당 평균소득	3,036만원	3,041만원	↑5만원(0.17%)	
대인도 교역량	55억 달러	88억 달러	↑33억 달러(60%)	
	대인도 수출	36억 달러	64억 달러	↑28억 달러(80%)
	대인도 수입	19억 달러	24억 달러	↑5억 달러(30%)
	무역수지	17억 달러	40억 달러	↑23억 달러
국내 취업자수 (제조업)	1,668만명	1,672만7600명	↑4만7600명	

인도의 개혁정책에도 불구하고 인도의 투자여건은 아직도 많은 부문에서 취약한 편이다. 취약점으로는 ① 인프라를 갖춘 부지확보 곤란 ② 단독으로 공장부지 매입시 각종 절차 지연 ③ 외국기업은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공장부지 매입 ④ 인프라 구축에 비용과다 지출(향후 경영압박 주요 요인임) ⑤ 공장부지 매입대신 임차시에도 인도기업보다 높은 임대료 지불(경쟁력 약화) ⑥ 공장부지 임차 후에도 전력, 수도 등 예기치 않은 인프라 공급중단 ⑦ 내수 판매시 막대한 유통비용과 미수금 회수 곤란 등이 있다.

이러한 여건에서 외국기업, 특히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인도에 투자 진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중에서도 부지 선정상의 어려움이 커서 우리 중소기업들은 현지에서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차원에서 우리 기업들을 위해 현지공단을 조성하여 임대할 경우 그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그 효과로는, 우선, 공장, 사무실 입지 선정 및 입주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해 줌으로써 진입비용을 크게 절감시킬 수 있다. 둘째, 예기치 못한 환경변화(전력, 용수 중단 등)에 공단 입주기업의 공동 대응이 가능하다. 셋째, 일단 인도시장에 정착하기만 하면 안정적으로 시장을 확보할 수 있다. 인도에서는 인프라 부족이 외국 경쟁업체에게 가장 큰 진입 장벽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 기업들에게 현지 공단 조성이 주는 혜택은 막대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인도에 진출한 중소기업의 공장 부지를 지원하기 위해 공기업(예 : 한국토지공사)이 인도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국 토지공사가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현지 기업들을 대상으로 일부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공사의 수익성 향상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인도투자에 실패한 사례

◇ 민경

- 투자연도 : 1992년 (지분율 33%) ○ 주요 생산품 : 안경테
- 실패사유: 동업자측의 사업 확장 거부, 비우호적 외국인 투자 정책 등으로 현지 투자 철수중

◇ 동인석재

- 투자연도 : 1988년 (지분율 100%) ○ 주요 생산품 : 석재
- 실패사유: 저렴한 인건비를 예상·투자하였으나, IMF이후 본사 경영악화로 철수

◇ 삼성코닝

- 투자연도 : 1994년 (지분율 6.9%) ○ 주요 생산품 : 유리
- 실패사유: 수요부족에 의한 사업성 악화로 지분 매각 협상중

◇ 성산

- 투자연도 : 1996년 (지분율 35%) ○ 주요 생산품 : 자동차부품
- 실패사유: 대우자동차 협력업체로 진출하였으나, 대우자동차 파산으로 폐업

◇ 종근당 바이오

- 투자연도 : 1994년 (지분율 42%) ○ 주요 생산품 : 제약원료
- 실패사유: 다국적 기업과의 경쟁심화

② 교역 증진 방안

가. 기업전략

인도경제의 급속한 성장은 우리경제에도 투자 확대는 물론 교역 증진의 기회를 넓혀주고 있다. 인도 경제의 성장세는 휴대전화, 가전제품 등 내구소비재의 對인도 수출을 증대시키는 한편, LG전자·현대자동차·삼성전자 등의 현지 투자 확장에 힘입은 자본재 수출 역시 확대시키고 있다.

앞으로는, 우리 기업들의 성공적인 인도시장 진입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수출대상품목과 투자대상품목을 전략적으로 선택하여야 한다.

자동차의 경우 한인도 CEPA 등에 의해 관세(현재 최대 108%)가 대폭 인하되지 않는 한 당분간 투자 중심의 전략을 유지해야 한다. 이러한 인도 현지생산에 의한 자동차 판매의 확대는 관련 부품과 생산설비의 수출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LG, 삼성 등의 휴대전화, 가전제품 역시 그러하다. 인도시장에 맞춘 현지화 상품을 인도 내에서 생산·판매하는 전략이 유효하다. 특히, 월 500만 명씩 가입자가 늘어나는 인도의 휴대전화 단말기 시장에서 최대 휴대폰 메이커인 핀란드의 노키아는 2005년 중에 첸나이 인근에 대형 단말기 공장을 5개월 만에 준공한 바 있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도 다국적 기업과의 경쟁을 위해 인도인들이 선호하는 고품질·저가형 제품 등을 조속히 개발하는 등 인도시장에 대한 투자 강화가 요청되고 있다.

한편, 우리 기업에 비해 인도에 일찍 진출하였으나, 인도 리스크를 의식하여 진출속도를 조절해 왔던 미국, 일본 등의 기업들이 최근 우리기업의 인도시장 약진에 자극받아 투자시점을 앞당겨 '우리나라 기업 따라하기'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상황이다. 이에 우리 기업으로서는 미국, 일본 등의 다국적기업 진출 확대에 따른 경쟁 심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자금력과 정보력을 갖춘 대기업은 그나마 수출·투자 방식의 선택을 통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인도 진출을 가속화할 수 있는데 비해, 중소기업의 경우 대인도 교역증진에 여전히 많은 애로요인이 가로막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91년 이후 15년간 지속되어온 인도의 개방정책으로 시장자유화와 제도적인 비관세장벽 완화가 상당정도 성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중소기업은 지역별, 계층별로 다양한 인도시장의 특성과 비즈니스 관행을 철저히 파악하고, 적정한 취급품목의 선정과 함께 거점지역별에 맞춘 시장접근 전략을 강구해 나갈 필요가 있다.

우리 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수출전략으로는 ① 무역거래에 있어 신용도 문제가 많이 발생하므로 초기 결제조건을 강화 ② 브랜드 마케팅 강화 ③ 가격 지향적 수출상품 구성 ④ 거점상권별 에이전트 활용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리 중소기업과 인도 바이어와의 무역거래에 있어 바이어의 신용도 문제가 자주 발생하므로, 초기 거래의 결제조건은 L/C at sight, T/T in advance 등 현금거래에 가까운 결제조건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이후 어느 정도 신뢰관계가 구축된 시점에서는 Usance 등 외상거래를 활용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이다.

또한, 인도는 세계 유수의 다국적 기업과 인도 기업들이 제한된 구매 계층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시장이다. 그동안 우리의 대인도 수출이 주로 잔여 수출물량을 처분하는 형태로 이루어짐으로써 최근까지 우리 상품의 브랜드 인지도는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우리 제품의 브랜드 인지도를 개선하기 위한 우리 기업들의 마케팅 강화 노력이 요청된다.

나아가, 인도에서는 가격이 절대적 구매결정 요소이므로 인도시장에 적합한 가격대의 제품구성이 요청된다. 인도의 높은 관세율을 감안할 때 내구성 등 품질의 우수성을 집중 홍보함으로써 실질적인 가격인하 효과를 부각시키는 방안도 필요하다.

한편, 인도의 전체 상권은 뉴델리, 뭄바이, 첸나이, 콜카타의 4대 거점상권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으므로, 이들 권역별로 지배적 상인 카스트를 에이전트로 활용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나. 정부지원

한인도 교역 확대를 위한 정부의 지원은 수출기업의 인도 시장에 대한 정보 수요를 충족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 ① 인도시장과 바이어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② 인도 시장 전문가 육성 ③ 인도 주정부와의 결연 강화를 통한 제도 개선 지원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인도 시장은 시장태동기라 할 정도로 축적된 시장정보가 부족한 실정이므로, 정부 차원에서 주별·거점별·품목별 시장정보를 수집 정리하여 이를 업계에 제공하는 역할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또한, 인도 바이어의 경우 상인 카스트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들의 계보 및 거래 관행을 수집하여 이를 업계에 전파하려는 노력이 필요 하다. 이를 통해 ‘인도시장에 특화된 수출 매뉴얼’, ‘인도시장 진출에 있어서의 성공과 실패 사례’ 등의 자료 발간이 요청된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국내 인도시장 전문가를 집중 육성함으로써 2030년경 세계의 경제대국으로 급부상할 교역 파트너로서의 인도 시장에 적극 대비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인도의 주요 거점과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체간(예, 첸나이와 울산 등) 자매결연 등을 통해 공무원 인력 파견, 자료 교환, 지방정부간 협의 창구 개설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인도는 한인도 CEPA 공동연구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각종 법령과 정부제출 양식이 한글 위주로 작성된 것을 비관세 장벽의 하나로 지적한 바 있다. 일본의 경우 주요국과의 무역 마찰 해소 차원에서 JETRO를 통해 외국인용으로 자국 법령의 영문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이를 참고하여 국내 법령 등의 영문화 작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③ IT 협력확대 방안

가. 기업전략

인도의 소프트웨어부문과 우리의 하드웨어부문을 접목 활용

양국 IT산업은 서로의 주력분야 등이 달라 우리 기업이 인도 진출시 기술이전에 따른 부메랑 효과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은 반면, 상호간 보완효과는 상당히 크다. 또한, 국내 산업생산 활동에 인도의 IT 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경우 비용구조 개선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만큼, IT부문 협력 방안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우리나라 제조업 기술과 인도의 S/W 개발경쟁력을 결합하여 제3국에 동반진출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미국기업 등은 진출초기 부가가치가 낮은 부문부터 투자한 다음, 점진적으로 기술협력을 고도화하여 왔다. 즉, 수출입 형태의 On-site · Off-shore 프로젝트형태에서 FDI를 통한 현지 R&D센터 구축과 운영으로 발전하여 왔다. 협력의 내용도 단순 테스트와 코딩에서 고급수준의 SW 부문 설계로 성숙되었으며, 나아가 특정 SW 완제품을 턴키베이스 형식으로 계약하는 수준까지 고도화되어 왔다.

우리의 경우 상대적으로 발달한 하드웨어 부문과 인도의 소프트웨어를 접목시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자동차와 섬유산업에서 인도의 IT기술을 응용한 세계적인 디자인 기술을 활용할 경우 우리의 경쟁력이 크게 높아질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제조업 관련 아웃소싱 확대는 물론 ITES-BPO 등을 통해 비용 절감형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나. 정부지원

IT Park 설치 등 중소 IT기업 진출 지원 적극 검토

인도 산업의 최대 강점인 IT S/W부문을 적극 활용하지 않고서는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확대는 물론 경쟁국과의 경쟁에서도 밀릴 우려가 있다. 미국, 일본 등 선진기업들의 대부분은 물론 중국 등 개도국도 최근 인도의 IT인력 유치, 인도에 R&D센터 설치 등에 적극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지원의 방향은 대기업 보다 중소·벤처기업을 우선하여 고급 인력과 기술의 교류 확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당장 인도 고급 IT인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 협정체결 등을 통해 기업의 법정 연금 부담을 축소하고 인력협정을 체결한 국가에 대해서는 '골드카드'¹⁴⁾ 제도를 현행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우리 중소·벤처기업이 인도 고급인력을 보다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보다 장기적으로는 인도에 IT산업 전용단지를 설치해 양국 IT산업 인력유치와 기술 교류의 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싱가포르는 인도 대기업(Tata그룹)과 공동으로 인도 방갈로에 8만3,000평 규모의 IT전용단지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싱가포르에 진출한 1,000여개의 인도 기업중 절반 이상이 IT 기업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우리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원이 등이 주관하는 해외 IT지원센터인 iPark(미국, 일본, 중국 등 7개 운영)의 인도 설치를 우선 검토해 볼 수 있다.

14) 첨단산업분야의 해외 고급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출입국시 특혜를 부여하는 제도로서, 복수사증 발급, 체류상한기간 연장(2년→3년), 소득세 면제 3년으로 연장, 체류자격과 활동범위의 확대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4 인력·과학기술 협력확대 방안

1 우수한 고속련 인력 유치방안 마련

우리나라의 중장기 인력전망 등을 고려할 때 고급인력에 대해서는 문호를 적극 개방하여, 대학교육 과정부터 문화적 적응력을 제고시킨 다음, 국내 기업들에서 근무할 기회를 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인도 유학생을 적극 유치하는 경우 우수 기술인력의 확보, 친한국적 인도인 풀 형성, 동북아에서의 우리나라의 위상 제고 등을 도모할 수 있다.

외국인력 유입에 소극적이었던 일본도 '아시아 인재 기금 제도' 하에 일본에서 공부한 외국 유학생들이 일본 기업에 취직하는 경우에는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등 우대조치를 검토 중이다. 중국도 종전의 인력 송출 정책에서 벗어나 과감히 인력 유치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대학졸업 후 일정기간 국내취업이 가능한 사증제도를 도입하고, 일정 거주기간 요건과 납세경력을 충족하면 영주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장기적 인력수요에 대비하는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이외에 인도의 고학력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학교법인 등을 통한 인도 유학생의 초청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인도 장학생 유입을 확대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KAIST, 포항공대 등 우리나라 대학과 인도 공과대학 등과의 교류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 구체적 예가 될 수 있다.

일본이 1998년 이후 공적개발원조 자금 등을 활용하여 학생교류 협력을 강화하였던 경험을 참조하여, 우리도 공적개발원조(ODA) 자금 등을 활용하여 교류 프로그램을 증진시킨다면 좋은 성과가 예상된다.

또한, 부족한 인도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① 인도 현지 대학 진학자에 대해 장학금을 수여하는 방안 ② 국내 인도 전문 대학원 설립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한·인도 인력협력 강화

현재 인도는 우리나라와 교육, 의료, IT 분야의 인력협력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인도의 입장에 대해 우리나라는 출입국 관리의 원칙은 견지하되, 단기적 인력이동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수세적인 태도로 임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분야를 인도 인력에게 문호를 개방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기업들의 수요가 적어 인력이동이 대폭 확대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영어교사는 발음문제 때문에, 간호원은 인사관리의 문제 등으로 현재 국내에 영어교사·간호원으로 인도인을 채용할 유인을 갖는 교육기관이나 의료기관이 그다지 많지 않다. 의료분야의 저숙련 인력은 단기적으로는 개방의 효과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인 견지에서는 인도인력을 보조인력으로 활용하려는 의료기관이 대두할 가능성은 있다. 예컨대 우리사회의 고령화에 따른 간호인력의 수요가 급증하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서비스 기관이 발달 한다면, 인도의 의료 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인도 인력이 주로 영어 상용국가들에 주로 진출해 있는 것을 보면, 인도의 IT분야의 고급인력은 미국 등에 진출하는 것이 1차적 목적일 것이므로, 우리나라에 오려고 하는 인도 인력자원 수준이나 인력 규모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인도의 IT 전문인력의 유입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국내에 IT파크를 설립하는 등 근로여건 등의 획기적인 개선을 통한 다양한 인력도입 정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인도의 고급인력을 유치함에 있어 장애가 되는 제도적 요인 등을 적극 발굴·개선시키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참고 1> 인도 일반개황

□ 자연지리

- 국토면적 : 3,287,590 km²
- 인 구 : 10억 5,000만 명(2004년 9월말)
- 기 후 : 열대몬순
- 시 간 대 : 우리나라보다 3시간 30분 늦음

□ 행 정

- 공식국명 : 인도공화국(The Republic of India)
- 수 도 : 뉴델리(New Delhi)
- 행정조직 : 28개 주, 7개 직할지(Union Territories)

□ 정 치

- 정부형태 : 내각책임제
- 대 통 령 : 압둘 카람(A.P.J. Abdul Kalam, 2002년 7월 취임, 임기 5년)
- 의회형태 : 양원제(상원 245석, 하원 552석*, 2004년 4월 14대 총선 개최)
 - * 주와 직할지에서 각각 530명, 20명을 선거를 통해 뽑고, Anglo-Indian Community에서 최대 2명까지 대통령이 지명 가능
- 총 리 : 만모한 싱(Manmohan Singh, 2004년 5월 취임)
- 주요정당 : 국민회의당(Congress, 집권당, 20개 정당과 UPA 연립정부 구성), 인도인민당(BJP, 제1야당), 공산당(CPI-M, 연정 참가), 사마지와디당(SP, 연정 참가) 등

□ 사회·문화

- 민 족 : 인도 아리안족(72%), 드라비다족(25%), 몽골족 및 기타(3%)
- 언 어 : 힌두어외 17개 공용어, 영어(상용어)
- 종 교 : 힌두교(82.4%)와 회교(11.7%), 기독교(2.3%), 시크교(2.0%), 불교(0.8%), 자이나교(0.4%) 등
- 공 휴 일 : 공화국의 날(1.26), 독립기념일(8.15), 성탄절(12.25)

<참고 2> 주요 경제지표

1. 최근 경제동향

구 분	단 위	2000/01	2001/02	2002/03	2003/04	2004/05	2005/06
인구	백 만 명	1,012	1,030	1,046	1,062	1,080	1,097
경상 GDP	억 달 러	4,773	4,855	5,076	5,477	6,915	-
1인당 경상 GDP	달 러	478	473	485	516	610	-
실질 GDP 증가율	%	4.4	5.8	4.0	8.5	6.9	8.4
소비자물가상승률 ¹⁾	%	3.8	3.7	4.1	3.5	4.2	5.0
재정적자 (GDP비중)	%	△5.5	△5.1	△5.4	△4.6	△4.2	-
경상수지	억 달 러	△27	34	63	106	△64	21.6
무역수지	억 달 러	△125	△116	△107	△155	△273	△395
수출	억 달 러	455	447	538	647	793	1007
수입	억 달 러	579	563	645	802	1,066	1,402
외환보유고 ²⁾	억 달 러	396	510	719	1,130	1,415	1,516
환율(연평균)	루피/달러	45.7	47.7	48.4	46.0	45.3	44.1

주 : 인도의 회계연도는 4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이고, 주요지표의 연도는 회계연도 기준

1) 공업노동자 연평균 물가(1982=100), 2) 금과 SDR 포함, 기간 말 기준

자료 : Government of India, Ministry of Finance, Economic Survey, 각년호.
Government of India, Ministry of Finance, Monthly Economic Report,
Reserve Bank of India, Annual Report, 각년호.

2. 향후 경제전망

구 분	2006/07		2007/08	
	EIU	Global Insight	EIU	Global Insight
실질 GDP 성장률(%)	7.2	6.8	6.5	6.6
소비자물가상승률(%)	4.8	4.8	3.6	4.7
경상수지(십억 달러)	-24.6 (GDP대비 -1.6%)	GDP대비 -2.4%	-30.2 (GDP대비 -2.4%)	GDP대비 -2.8%
환율 (연평균, 루피/달러)	43.00	45.01	42.50	46.17

자료 : EIU, India Country Report, March 2006.

Global Insight, Asia and Oceania Monthly Outlook, March 2006.

<참고 3> 한-인도간 분야별 교류협력 현황

1. 외교분야 협력현황('06년 주요 외교일정)

□ M. Singh 총리 방한 문제

- '04.10.5 정상회의시 Singh 총리의 방한을 초청하였으며, '05.8.1 외교장관간 제4차 공동위시 상호편리한 시기에 양국 총리간 상호방문을 실시하기로 합의
- Singh 총리는 '05.12.13 정상회담시 대단한 성공을 이룩한 한국을 방문하게 되기를 고대한다고 언급
- '06.2.7 정상회담시 Kalam 대통령은 12월 EAS(필리핀 세부)계기에 Singh 총리가 방한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언급

(양국간 주요인사 교류)

- '86.3 노신영 국무총리 방인
- '93.9 Rao 총리 방한
- '96.2 김영삼 대통령 방인
- '99.2 김종필 국무총리 방인
- '04.10 노무현 대통령 방인
- '05.12 EAS 계기 양자 정상회담 개최
- '06.2 Kalam 대통령 방한

□ 제5차 한·인도 공동위

- 한·인도 공동위는 '96년 김영삼대통령 인도 방문시 양국 정상간 합의사항
 - 제3차 공동위는 '04.12 Singh 외교장관 방한시 개최
 - 제4차 공동위는 '05.8 우리 장관 인도방문시 개최
- '06 4/4분기중 개최에 잠정 합의하였으나 실제 개최 여부는 양국의 외교일정상 불투명한 상황

□ 제2차 한·인도 외교안보대화(Foreign Policy and Security Dialogue)

- '06 7.20 서울 개최(외교부 아태국장을 수석대표로 외교부, 국방부 대표단이 참여)
 - 제1차 대화는 '05.1 인도 델리에서 개최

2. CEPA협상 추진현황

□ '06.2 Kalam 대통령 방한계기 CEPA 추진 개시 선언

- 2007년말까지 협상완료를 목표, 협상은 약 2개월 간격, 양국에서 교대로 개최

□ '06년중 4차에 걸쳐 협상 진행

○ JTF 제1차 회의개최(3.23-3.24, 뉴델리)

- 협상추진 세부일정, 협상분과 구성방안, 협정문·양허안의 교환시기 및 방법 등 세부적인 협상추진방향 논의

* 수석대표 : 김종근 통상교섭조정관, S.N. Menon 상공차관

○ JTF 제2차 회의 개최(5.10-5.12, 서울)

- 상품 자유화의 방식 및 정도, 비관세장벽 해소, 원산지 규정, 서비스 및 투자자유화를 위한 기본원칙 등 협정문 초안 논의

* 수석대표 : 김한수 자유무역협정국장, Dr. Khullar 상공부 차관보

○ JTF 제3차 회의 개최(7.18-21, 뉴델리)

- 양자 세이프가드, 내국민대우, 시장접근 조항 합의문안 마련, 서비스·투자 및 협력 등 분야 논의

* 수석대표 : 김한수 자유무역협정국장, Dr. Khullar 상공부 차관보

○ JTF 제4차 회의 개최(10.10-13, 서울)

- 투자 자유화 방식, 원산지 일반기준, 서비스 분야 양허·유보안 협의, 무역·투자진흥·섬유 등 협정문 초안 마련 등

* 수석대표 : 김한수 자유무역협정국장, Dr. Sharma 상공부 동아시아 국장

□ '07.1월중 뉴델리에서 제5차 협상 개최 예정(잠정)

3. 세관분야 협력현황

□ '94년이후 관세분야 협력을 위한 '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을 논의, '06.2월 인도 대통령 방한시 협정 서명

* 주요내용 : 관세관련 정보교환, 관세법 위반 범죄의 효과적 단속 및 예방 등 규정

- 동 방한시 우리 대통령은 IT기술을 적용한 우리의 신속한 통관시스템을 소개하고, 양국간 세관협력 방안의 하나로 제시
- 한-인도 관세청장 회의 개최 추진('06 하반기 추진예정)

4. 세계지식 플랫폼 및 e-business network 구축문제

- '06.2월 한-인도 정상회담시 Kalam 대통령이 양국간 새로운 협력가능 분야로 'World Knowledge Platform' 및 'e-business network' 구축 추진을 제안

* 세계지식플랫폼(World Knowledge Platform) 구축

- 한국, 일본 및 아시아 각국이 각자의 핵심능력을 결합, 지식상품(knowledge products)을 공동으로 개발·생산·판매하는 제도적 협력관계
- 각국 연구개발기관, 대학, 기업체들을 연결하는 광역 브로드밴드 네트워크를 구축, 선택된 분야의 연구개발 수행
- 추진분야(안) : 에너지, NT, BT, IT(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센서 등

* e-business network 구축

- 양국 기업 및 무역업체간 e-business network를 구축, 정보공유 확대, 협력파트너간 교육프로그램 및 지식 연계망 등 실현

5. 에너지 자원분야 협력현황

□ 한-인도 에너지분야 협력 MOU체결

(’05.11, 양국에너지장관 회담 계기)

- 석유가스 포괄적 협력 MOU(산자부-(인)석유·천연가스부)
- 석유전략비축 협력 MOU(석유공사-(인)석유산업개발위원회)
- 석유자원개발 협력 MOU(석유공사-(인)국영석유공사)
- 가스하이드레이트 기술협력 MOU(가스하이드레이트사업단-DGH)
- 수소·CNG 협력 MOU(가스공사-IOC R&D 센터)
- 수소·연료전지 기술협력 MOU(KIST-IOC R&D센터)

□ 한-인도간 제3국 자원개발사업 공동참여 현황

- 나이지리아 탐사광구 낙찰(’05.8) : 한국 컨소시엄 65%, ONGC 25%
- 미얀마 A-3 지분양도 계약(’05.10) : 대우인터내셔널 지분 일부(30%)를 인도회사(ONGC 20%, GAIL 10%)에 양도

□ 에너지 안보대화

- ’05.8.1 제4차 공동위(뉴델리)시 인도측 제의로 에너지 안보대화 창설에 합의하였으나, 아직 인도측으로부터 구체적인 제안은 없는 상황

6. 국방분야 협력현황

- 90년 경비정 1척(12백만불)외에 인도에 대한 방산 우리 수출은 없으며, 국방대학교 상호교류, 우리군 위탁생 과견(1~2명), 순항함대 상호방문 등 수준의 교류진행중
- 군수·방산분야 협력 MOU는 군수·방산협력 관련 정보교환, 연구개발, 공동생산 및 훈련분야 협력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금년 4/4분기경 제1차 공동위원회 개최 추진중

7. 해상안전분야 협력현황

- 해적에 의한 선박탈취 상황을 가정하여 양국 경비세력 (양국의 경비함정 각 1척, 헬기 특공대)이 합동으로 진압 및 인명구조 훈련 실시

□ 해양경찰청간 협력 MOU 체결

- 해적 등 국제범죄 관련 정보교환, 해상수색구조 관련 협력 등
- 이승재 해양경찰청장 인도 방문('06.3.13~17)시 서명
- 해상안전분야 합동훈련 실시(7.5 인도 첸나이항)

□ 해운협정 체결 추진중

- '83년부터 논의가 시작되었으나, 인도측은 우리나라가 인도로부터 수입하는 제철원료에 대한 인도 선사의 수송권 확보를 위해 화물의 균등적취를 주장함에 따라 양측간 문안 합의에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
- 우리측은 국제 해운시장의 자유경쟁에 위배되는 균등적취의 수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임

8. 건설분야 협력현황

- '05년 인도 상공부는 인프라개발 및 에너지 확보를 위해 2012년까지 총 5,020억불 규모의 투자가 소요될 전망
- 대인도 건설시장 진출현황 : '06.1월까지 66억불 수주(77건 공사)
 - '05.11월 현재 두산중공업, 삼성중공업 및 삼성엔지니어링 등이 석유화학, 해양플랜트 등 31억불 규모의 7개 사업수주 추진중

9. 우주분야 협력현황

- 인도 마드라스에서 '우리별 3호' 위성 발사('99.5)
 - 인도는 우리 위성이 인도 로켓발사체를 이용하여 발사되기를 희망하나, 현재 우리나라는 러시아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우주발사체 사업을 추진중

10. IT분야 협력현황

- 인력양성 문제는 인도 Aptech사의 소극적인 태도로 진전이 없는 상황이나, 국내 HW 기술, 인력지원 사업과 연계한 SW협력센터 설립방안을 검토, 인도측과 협의예정
- 임베디드 SW의 경우 2007년에 1만여명 인력부족 예상
-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SW전문인력의 도입방안 검토
- '06.6 Maran 인도 정통부장관 방한 계기 한·인도 정보통신장관 회담 개최

<참고 4> 인도경제 관련 보고서 목록

□ 국내자료

1. 강준경. 2005. 『인도의 對중국 교역확대와 인도시장에서의 韓·中·日 상품 경쟁구조 변화』 . kotra
2. 사카키바라 에이스케. 2006. 『전세계 비즈니스 시장의 마지막 블루오션 인도를 읽는다』 . 황금나침판
3. 송권호. 2005. 『인도 IT인력의 對美 수출성공사례와 시사점』 . 한국무역협회
4. 심남섭. 2004. 『인도의 성장잠재력과 진출확대방안』 .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
5. 양은영. 2006. 『한-인도 CEPA 체결과 우리나라의 對인도 수출 유망품목』 . kotra
6. 오영석. 2005. 『인도의 산업은 부상할 것인가 : 인도 산업의 현황과 전망, 그리고 2020 비전』 . 산업연구원
7. 유태환. 2005. 『인도의 대외경제정책과 한·인도 경제협력 강화방안』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8. 유태환. 2004. 『한-인도 FTA 체결의 타당성 및 경제적 효과 분석』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9. 윤희춘. 2006. 『對 인도 투자, 이것만은 알아두자』 . kotra
10. 이운용. 2005. 『인도의 산업기술정책』 . 한국산업기술재단
11. 정동형. 2006. 『인도 IT산업 노동시장과 인적 자본』 . 부산대학교
12. 주동주. 2004. 『인도경제의 부상과 한·인도 산업협력 방안』 . 산업연구원
13. 주인도대사관. 2005. 『인도 통상·투자 진출안내서 = Trade and Investment Guide to India』 . 주인도대사관
14. 한국무역협회. 2005. 『글로벌 아웃소싱 현황과 인도의 BPO 산업』 . 한국무역협회

15. 한국수출입은행. 2004. 『인도 : 국가현황 및 진출방안』 . 한국수출입은행
16. kotra. 2004. 『인도 비즈니스 로드맵=India business road map』 . kotra
17. kotra. 2004. 인도-태국 FTA가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 kotra
18. kotra 통상전략팀. 2006. "Chindia 시장진출전략 심포지엄 2006". kotra
19. kotra·KIEP. 2006. 『국가정보 : 인도』 . kotra, KIEP

□ 국외자료

1. Academic Foundation. 2004. *India vision 2020 : the report : report of the Committee on India Vision 2020, Planning Commission, Government of India plus background papers.*
2. Dahlman, Carl J. 2005. *India and the knowledge economy : leveraging strengths and opportunities.* World Bank
3. Devare, Sudhir. 2006. *India southeast Asia : towards security convergence.*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4. Dyson, Tim. 2004. *Twenty-first century India : population, economy, human development, and the environment.* Oxford University Press
5. Favaro, Edgardo. 2004. *Fiscal policies and sustainable growth in India.* Oxford University Press
6. Goldstein, Andrea E. 2006. *The rise of China and India : what's in it for Africa?.* Development Centre of the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7. Gulati, Ashok. 2005. *Institutional reforms in Indian irrigation.* SAGE Publications

8. Jayakumar, Vivekanand. 2005. *Exchange Rate System in India : Recent Reforms, Central Bank Policies and Fundamental Determinants of the Rupee-Dollar Rates*.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9. Ministry of Finance. 2005. *Economic survey 2004-2005*. Ministry of Finance
10. Mohan, T. T. Ram. 2005. *Privatisation in India : challenging economic orthodoxy*. Routledge Curzon
11. Morris, Sebastian. 2004. *India infrastructure report 2004 : ensuring value for money*. Oxford University Press
12. Nagesh Kumar. 2006. *Indian-Asian economic relations : meeting the challenges of globalization*. Research and Information System for Developing Countries
13. Pandit, V. 2004. *Economic policy modelling for India*. New York
14. Parikh, Kirit S. 2005. *India development report 2004-05*. Oxford University Press
15. Research and Information System for the Non-aligned and Other Developing Countries. 2004. *India-ASEAN partnership in an era of globalization : reflections by eminent persons*. Research and Information System for the Non-Aligned and Other Developing Countries
16. Sivaramakrishnan, K. C.. 2005. *Handbook of urbanization in India : an analysis of trends and processes*. Oxford University Press
17. Sivasubramonian, S. 2004. *The Sources of economic growth in India : 1950-1 to 1999-2000*. Oxford University Press

18. Tseng, Wanda. 2005. *India's and China's recent experience with reform and growth*. Palgrave Macmillan/International Monetary Fund
19. World Economic Information Services. 2006. インド = *India*. 世界経済情報サ-ビス(ワイス)
20. World Economic Information Services. 2006. インド = *India*. 世界経済情報サ-ビス(ワイス)
21. 岡本幸治. 2004. インド亞大陸の變貌. 展轉社
22. 内山秀二. 2006. 躍動するインド經濟：光と陰. アジア經濟研究所
23. 島田 卓. 2005. 超巨大市場 インドすべて. ダイヤモンド社
24. 門倉貴史. 2006. インドが中國に勝つ. 洋泉社
25. 西村哲. 2005. インド經濟 産業デ-タ ハンドブック 05年版. アジア産業研究所
26. 小島眞. 2004. インドのソフトウェア産業：高収益復活をもたらす戦略的ITパートナー. 東洋經濟新報社
27. 椎野幸平. 2006. インド經濟の基礎知識. ジェトロ

참가 연구진 명단

기관	성 명	분 야	비고
KIET	김도훈 *	팀 장	
KIEP	이순철	집필총괄	
경희대	강정모 *	전략분석	
포스코경영연구소	김봉훈	정치 및 금융	
삼성경제연구소	박번순	중국비교분석	
자동차산업 연구소	박홍재 *	기업투자사례	
영산대학	이운용	투자환경	
무역연구소	이중호	무 역	
롯데경제연구소	조충제	IT 및 유통물류	
노동연구원	허재준	노동 및 인력	

(가나다순) * 표시는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위촉전문위원